

학
900
99년

제주 4·3항쟁 연구

-통일정부수립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중심으로-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歷史教育 專攻

韓 美 暎



제주 4·3항쟁 연구

-통일정부수립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중심으로-

指導 方 基 中 教授

이 論文을 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9年 6月 日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歷史教育 專攻

韓 美 暎

韓美暎의 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1999年 6月 日

목 차

국문요약

1. 서론	1
2. 제주 4·3 항쟁의 정치적 배경	4
1) 해방 후 국가건설노선의 대립	4
2) 미국의 냉전정책과 단정노선의 대두	9
3. 제주의 통일정부 수립운동 형성	16
1) 민중운동의 전통	16
2)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 활동	26
4. 제주 4·3 항쟁의 발발과 단선반대 민중운동	34
1) 제주 남로당 세력의 성향	34
2) 4·3 무장봉기와 단선반대 민중운동(1945.4.3- 8월말)	49
5. 제주 4·3항쟁의 성격 변화와 귀결	60
1) 분단정부 수립 후 인민공화국 지지운동으로의 변화 (1948.9~1949.5.15)	60
2) 항쟁의 좌절과 민중 수난의 지속	68
6. 결론	75
참고문헌	78
ABSTRACT	82

[국문요약]

제주 4·3항쟁 연구

-통일정부수립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전공 한미영

본 연구는 세계화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주체의 확립에 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남북한 분단과 지역사회 갈등을 해방정국 시기의 제주도 4·3항쟁이라는 상황하에서 서술하려 한다.

제주 4·3항쟁은 제주도의 역사적 민중항쟁 속에 흐르는 반외세, 반정부, 자치 독립주의가 남북분단이라는 상황하에서 남로당의 단독선거 반대투쟁을 매개로 1948년 4월 3일 발발한 통일정부수립운동이다. 4·3항쟁의 통일정부수립운동은 직접적으로 미소의 이데올로기 세계질서 대립과정의 부산물인 분단에 의해 야기된 것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4·3항쟁의 통일정부수립운동의 과정 속에서는 정부의 탄압과 제주도민의 반정부적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다.

5·10단선이라는 남북분단의 위기하에서, 제주도당은 5·10단선을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는 인식과 미군정, 우익의 탄압으로부터 당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와 지는 상황 속에서 당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자위적인 측면이 맞물리면서 4·3무장투쟁을 결정하였다. 제주도당의 이러한 결정은 3·1절 기념시위와 3·10총파업을 기점으로 탄압을 가중시켰던 미군정과 중앙과 지방의 갈등구조를 이용한 보이는 서북 청년단의 탄압에 투쟁하려는 일반 제주도민의 상황과 결합하면서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따라서 4·3투쟁의 측면은 제주도당의 독자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단선저지

라는 정치적인 측면과, 제주도민의 투쟁방향에 따른 미군정·경찰·서북 청년단의 탄압에의 투쟁이라는 측면이 혼재되어 통일정부 수립론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4·3항쟁에서의 통일정부론에서는 단선저지와 미군정·경찰·서북 청년단의 탄압으로 인해 정치적 성격을 가진다. 제주 4·3 항쟁에서의 통일정부 수립론은 3시기로 전개된다. 제1시기는 단선이 시작되기 전까지인 1948.4·3-8월말까지의 시기로, 제주민중이 과거의 역사적 저항운동의 경험, 해방이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 운동주체(남로당) 역량에 대한 낙관적 인식과 객관적 정세의 주관적 판단 등이 복합적으로 상승 작용하여, 당중앙과 분리되어 자주적인 남로당과 연대해 민중항쟁으로 발전·전개된 시기이다. 이 시기는 보복적 차원의 성격이 강했으며, 단선반대를 통일정부 지지로 인식했다.

제2시기는 1948.9월-1949.5월 15일로, 비록 제주도에서는 선거를 파탄·저지시켰지만 중앙에서는 선거가 치러지고 단독정부 수립이 기정 사실화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남로당이 당 중앙과 긴밀히 연계되면서 단선반대는 곧 남한정부에 대한 반대이며 이들의 통일정부론은 인민공화국의 지지였다.

제3시기는 1949.5.15~1953.6월말로, 단독정부 수립 후 이제는 통일정부 수립이 아닌 본격적인 북한지지의 성격을 지니며 이로 인한 미군정과 남한정부의 탄압으로 민중에게 항쟁의 이상은 지워지고 수난의 현실이 다가오는 시기이다.

1. 서론

현 남한사회는 세계화로 나아가고 있다. '세계를 향해서'라는 한 기업의 광고 표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구화 진행과정에서 정부나 기업들만이 아니라 국민 개인들도 자신의 모든 행위의 척도를 세계라는 일반성에 맞추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과정은 당연히 자본의 이동과 동시에 문화적 현상의 세계화도 함께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주체의 해체를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지구화 된 시장 위에 군림하는 새로운 전체주의적 독재에 편입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란 문화적 차이를 없애고 하나로 통합하는 것과 동시에 이에 저항하는 새로운 지역문화의 창조를 함께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¹⁾

따라서 우리는 세계화와 동시에 주체의 확립을 다져야 한다. 주체 확립이라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큰 주체내의 분열로 남북한 분단과 지역사회 갈등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논자는 세계화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주체의 확립에 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남북한 분단과 지역사회 갈등을 해방정국 시기의 제주도 4·3항쟁이라는 상황하에서 서술하려 한다.

제주 4·3항쟁은 제주도의 역사적 민중항쟁 속에 흐르는 반외세, 반정부, 자치 독립주의가 남북분단이라는 상황하에서 남로당의 단독선거 반대투쟁을 매개로 1948년 4월 3일 발발한 통일정부수립운동이다. 4·3항쟁의 통일정부수립운동은 직접적으로 미소의 이데올로기 세계질서 대립과정의 부산물인 분단에 의해 야기된 것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4·3항쟁의 통일정부수립운동의

1) 송두율, 「세기말에 띄우는 송두율 교수의 조국통신- '세계화' '일체화', 제3의 길은 없는가」, 「말」, 1991. 1, 96쪽-99쪽.

과정 속에서는 정부의 탄압과 제주도민의 반정부적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4·3항쟁의 연구가 세계화 과정에서의 세계질서 편입의 모순, 분단, 지역갈등 문제에서 던져주는 시사점을 알 수 있다.

제주 4·3항쟁에 대한 언급은 철저히 금기되어 학계의 연구는 8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4·3항쟁에 대한 논의로는 민중의 자주적 방어항쟁으로서의 민중항쟁론, 남로당의 극좌주의적 폭동으로서의 남로당 폭동론, 제주도 공동체 파괴와 민중학살의 민중수난론 등이 있다.²⁾

이러한 논의들은 그 동안 역사 속에 은폐되어 있던 4·3항쟁을 발굴하고, 해방정국의 남북분단상황과 연계한 각 주체세력의 투쟁을 통해 분단상황을 재인식시켰다는 점에서 현대사에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4·3항쟁 항쟁의 주체를 극단일하게 설정하고 4·3항쟁을 그 주체들의 입장에 따른 사건적 측면에만 중점을 두어, 4·3항쟁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어떤 지향의 투쟁이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살피봄으로써 4·3항쟁의 통일정부론을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해방공간에서의 국가건설노선의 대립, 미국의 냉전정책과 단정노선의 대두를 통해, 해방후의 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열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선단정이라는 분단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2) 민중 항쟁론에 관한 주요 논문으로는 朴明林, 「濟州道 4·3 民衆抗爭에 關한 研究」, 고대 정의과 석사학위논문, 1988, 梁漢權, 「제주도 4·3 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金奉鉉·金民柱 공편, 「제주도 인민들의 4·3 무장투쟁사: 자료집」, 大阪: 文友社, 1963. (아라리연구원 엮음, 「제주민중항쟁」Ⅱ, 소나무, 1988.)

남로당 폭동론에 관한 주요 저서로는 김점곤,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 박영사, 1973, 김남식, 「남로당연구」Ⅰ, 돌베개, 1984, 존메릴, 「제주도 반란」, (노민영 엮음, 「잠들지 않는 남도」, 온누리, 1988.)

민중 수난론에 관한 주요 저서로는 오성찬, 「40년 제주의 한: '4·3사건의 진상」 「신동아」, 1988. 4월호, 오성찬,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 실천문학사, 1989.

둘째, 이러한 단선단정을 저지하고자 발생했던 4·3항쟁이 해방공간에서의 미군·경찰·서북 청년단에 대한 제주민의 저항성향과 이에 5·10단선을 계기로 무장투쟁노선으로 연대한 제주 남로당의 성향과, 제주 4·3항쟁의 발발과 전개과정을 통해 통일정부론으로 형성되어 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제주 4·3항쟁의 통일정부운동을 항쟁 이전의 건준·인민위원회 시기의 통일정부수립운동과 4·3항쟁의 통일정부운동으로 서술함으로써 제주에서의 통일정부수립론의 변모와 성격을 밝히고, 제주도의 통일정부론의 좌절과 탄압을 서술하고자 한다.

2. 제주 4·3항쟁의 정치적 배경

1) 해방 후 국가건설노선의 대립

8.15해방과 함께 우리 민족은 민중의 생활을 억압하였던 식민지 잔재와 반봉건요소를 청산하고 자주적 독립국가를 수립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결성되었다. 이러한 각 정치세력의 정부수립론에는 각 노선의 해방정국 및 국제정세 인식, 계급적 이해관계, 정부수립론의 이념적 지향과 방법론이 포함되어 있었고, 정치세력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권력장악을 기도했다.

이로 인해 해방 후 정부수립에 이르기까지 폭력과 군중시위를 동반한 치열한 권력투쟁이 전개되었으며 정국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현상은 이들 정치집단이 해방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부합된 정치체제를 수립하려 했기 때문에 파생된 것이었다. 이들 정치세력은 정당·정책에서 자신의 정치노선을 반영한 권력구조를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제반정책을 입안·실현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정치집단과의 마찰은 필연적이었다.³⁾

각 정파에 따라 입론의 차이가 적진 않지만 해방정국기 정부수립운동과 관련해서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계열의 정치적 입장이 대립하였다. 일제하 사회체제의 연장에서 자본주의국가 유지를 의도한 우익진영의 입장,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좌익진영의 입장, 때로 수정자본주의 내지 사회민주주의 입장을 취하면서 계급협조와 통일민주국가 수립을 주장하는 각종 중간파 입장이 그것이다.⁴⁾

3) 沈之淵, 「해방후 주요 정치집단의 체제구상 및 정책 비교」, 『韓國史 市民講座』 제12집, 1993, 一潮閣, 46-47쪽.

우익세력은 1945년 말 이승만과 임정세력이 귀국함에 따라 국내의 한국민주당과 함께 정립되었다. 이들은 반공·반소·반탁의 입장에서 완전히 동일했으나 3자는 내부적으로 많은 상호견제와 갈등을 지니고 있었다.

한국민주당은 1945년 9월 16일 중경임시정부 지지와 인민공화국 타도를 선언하며 창당되었다. 초기의 한국 민주당은 진보적 양심세력 등 다양한 세력이 참여했지만 곧 보수 친일세력의 집결체가 되었으며, 대중적 기반과 지방조직이 매우 취약했다.

한국민주당은 임정세력 초기에만 중경임정 추대운동을 벌이고 이후에는 소극적 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반면, 이승만과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때의 공동위원회 참가 표명으로 인한 잠시의 갈등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반탁·단정노선을 함께 했다. 한국민주당은 미군정과 밀착하여 군정청의 요직과 검찰, 경찰을 장악하여 중도 및 좌익세력의 탄압에 앞장섰다. 일체의 민족협동전선에 반대했던 한국 민주당은 친일파처단에는 시종일관 반대했을 뿐 아니라 근본적인 토지개혁에도 반대했다.⁵⁾

1940년 창당한 한국독립당은 1945년 11월 23일 환국 후 임정법통론을 내세워 임시정부 이름으로 활동했다. 김구와 임정세력은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 후 12월31일, 미군정에 대한 쿠데타를 시도하는 등 격렬한 반탁운동을 전개했으나 이는 임정의 실질적 해소와 미군정의 지지를 잃는 결과만 가져왔다. 이후에도 한국독립당은 고집스럽게 반탁을 주장했으며, 대북타격정책을 주도하고 한국 민주당과 수차례의 합당시도를 하는 등 이승만, 한국 민주당의 단정수립노선에 대체로 함께 하였다. 1947년 들어 중경임시정부 재추대운동을 다시금 벌이던 김구와 한국독립당은 1947년 9월부터 남북 총선거론을 들고 나와

4) 방기중,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1930.40년대 백남운의 학문과 정치경제사상」, 역사비평사, 1992, 13-14쪽.

5) 「자료 대한민국사」 1, 탐구당, 60-63쪽.

중도노선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반공의 입장에 서서 중도파의 한국통일 구상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1948년 4월 김구가 남북협상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이승만은 일제 강점기 아래 철저한 반소·반공주의자였다. 그는 미소간의 냉전이 심화되어 미소공위에 의한 한반도통일이 무산될 것을 확신했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한 후 이승만은 누구보다도 명확히 단독정부론을 폈는데, 그의 단정론은 모스크바회담의 일방적 폐기와 반탁운동, 그리고 자신이 주도하는 정권수립을 의미했다. 이것은 당시 중간파를 활용한 통합적 정계개편 및 과도정부 수립을 모색했던 미군정의 구상과 충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47년 3월 트루만독트린으로 미소대결구도가 최종적으로 자리잡음으로써 이승만의 단정노선은 남한의 현실정치를 장악하게 되었다.

해방에서부터 한국문제가 UN에 이관되는 1947년 9월까지 조선공산당·남조선노동당의 좌파 투쟁노선은 전체적으로 볼 때 주·객관적인 정세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기초로 하여 미·소의 협조를 통한 통일독립국가 건설을 전망하고 있었다. 1946년 7월 신전술의 채택은 이러한 기조 위에서 방법상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었다. 신전술 이전 시기 조공의 전술이 미군정에 직접적인 공격을 삼간 채 위로부터의 협력을 통해 인공의 기정사실화와 행정권의 이양을 바란다면, 신전술 이후는 밑으로부터 강력한 대중적 압력과 투쟁을 통해 미소공위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했다. 1947년 9월 이후는 단선단정반대와 미소 양군 철수, 인민공화국수립을 목표로 무장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중도파 정당으로는 중도좌파인 여운형의 조선인민당, 백남운의 남조선신민당, 중도우파의 안재홍의 국민당 및 김규식의 추종세력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이승만·한국민주당·한국독립당의 우익세력과 조공 남로당의 좌익세력

6) 『자료 대한민국사』 2, 탐구당, 705-706쪽.

의 극단적 대립을 지양하며 통일전선운동에 앞장섰다. 이들은 미군정의 중도파를 중심으로 한 남한 정계개편 구상과 맞물려 좌우합작운동을 펼쳤으나 극좌·극우세력들의 반대와 견제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공산주의자가 많이 침투해 있던 인민당과 신민당은 1946년 중반 이들에 의해 조공과의 3당합당이 급격히 이루어짐으로써 당자체가 와해되었다. 남로당에 합류하지 않은 인민당과 신민당의 인사들은 사회노동당으로 모였다가 다시 근로인민당을 결성했지만 여운형의 피살로 구심력을 잃고 군소 정당으로 전락했다. 안재홍의 국민당은 1946년 3월 한국독립당과 합당했으며, 김규식은 정당조직을 갖추지 않은 채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의장으로 있다가 이후 남북협상파를 이끌어 나갔다.

조선인민당은 일제 말 최대의 지하비밀결사였던 여운형의 건국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1945년 11월 12일 창당됐다. 통일전선의 매개체 역할을 자임하여 좌우합작운동의 구심점이 된 인민당은 근로대중을 중심으로 한 전 민족의 완전한 해방을 기본이념으로 하였다. 인민당은 계획경제제도의 확립을 주장했으며, 일제잔재와 반동분자만을 제외한 위에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이 제휴하여 애국적인 지주나 자본가까지도 포괄한 전인민을 대표한 대중정당을 표방했다. 그러나 인민당은 여운형 개인의 역량과 인기에 주로 의존하였고 독자적인 청년조직이나 대중조직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인민당에 들어와 있던 공산주의자들은 조선공산당의 3당합당에 호응하였고 여운형 등 인민당 우파는 이후 근로인민당을 조직하였다. 근민당은 인민당의 이념을 그대로 이어받았지만 여운형의 피살로 구심점을 잃고 군소정당으로 전락했다.

1942년 중국 연안에서 김두봉, 최익한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화북조선독립동맹은 1945년 12월 북한에 들어와 본부를 평양에 두고 활동하면서 남한에는 이듬해 2월 독립동맹 경성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평양의 독립동맹은 곧 조선신민당으로 개칭했고, 독립동맹 경성특별위원회는 1946년 7월 남조선신민

당으로 재발족했다. 신민당의 백남운은 모택동의 통일전선전략에 영향을 받아 무산계급이 양심적인 일부 유산계급과 통일전선을 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합성 신민주주의를 제창했다. 당시 조선공산당은 백남운의 이런 주의 주장에 격렬한 비판을 가하였다. 신민당은 인적구성에서 지식인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일반 대중과의 직접 연계는 부족했다. 북한의 신민당은 1946년 8월 북조선공산당과 합당하여 북조선로동당이 되었고, 남조선당이 되었고, 남조선신민당도 3당합당으로 남로당이 되었다. 3당합당에 반대한 백남운 등 신민당 대외파는 사회노동당을 거쳐 근로인민당에 합류했다.

김규식 추종세력을 위시하여 신민족주의를 주장한 안재홍의 국민당,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했던 원세훈의 고려민주당, 여운형 탈퇴 이후의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7원칙을 지지한 한국 민주당 탈당세력 등을 일반적으로 중도우파 세력으로 본다. 이들은 계속적인 이합집산 속에서 명확한 정당조직이나 독자세력을 구성하지 못했다. 정치적으로는 우익 및 미군정과의 협조노선을 중심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중도좌파와의 좌우합작을 추진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혁명적이지는 않지만 개혁의 급속한 실시를 요구했다. 미소공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선미소공위 참가와 임시정부 수립, 후반탁노선을 견지했으며, 남북연석회의를 기점으로 한 우익의 분화과정에서 단정참여세력과 통일운동세력으로 분리되었다.

이러한 각 정치세력의 입장은 분단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남한의 자본주의국가 건설노선인 자유민주주의노선과 북한의 사회주의국가 건설노선인 인민민주주의노선으로 정리되었고, 중간파는 양 노선에 흡수 용해되거나 파편화되었다.

당시의 정국은 각각의 정치집단이 자신의 대중적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한 대결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었고, 이에 의해 정부를 수립하는 것도 국가건설과

정의 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소 양군의 주둔 및 군정의 실시로 민족 내부의 자생적인 권력투쟁 및 정상적인 가치배분은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미·소는 상호균형을 취해가면서 내심으로는 자국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남북한에서 각각 외세와 결탁한 집단이 권력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당시 권력집단의 외세 의존적인 태도가 심화되어 갔고 분단이 고착되었던 것이다.

2) 미국의 냉전 체제와 단정 노선의 대두

한국문제를 둘러싼 미군정과 소련·소군정의 갈등은 해방직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미 극우적 성향이 강했던 미군정의 수뇌급 군인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 안된 시점에서 자신의 점령지역에서 사회주의자들이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련과 한국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회의적 반응을 보인바 있었다. 미소공위 예비회담과 제1차 미소공위에서 양쪽 대표는 서로를 불신하였고 현격한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중경임시정부 추대운동이자 반소 반공운동이었던 반탁투쟁과 미군정과의 관계는 소련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⁷⁾

1946년 말에서 1947년 초에 걸쳐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심각한 위기가 생겼다. 1946년 말 프랑스에서는 공산당이 총선거에서 제1당이 되었고, 이탈리아에서도 공산당이 지방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영국은 이미 종전 직후부터 버마, 말레이시아, 인도 등 아시아 등 여러 지역에서 민족 해방 운동의 저항에 직면하여 패퇴하였으며, 1947년 초에는 그리스로부터도 철병할 수밖에 없는

7)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2- 1948~1950 민족주의·민주주의 그리고 반공주의-』, 1996, 22쪽.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또 중국에서는 내전이 가속화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각각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식민지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따라서 전후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맹주로서 미국은 이러한 체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의 지배력을 확고하게 보장하며, 점차 강화되고 있는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봉쇄정책을 수행해야 될 처지에 직면했는데,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 트루만 독트린이었다.⁸⁾ 그러므로 트루만 독트린은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구체적인 언명에서 시사되듯이 혁명적인 세력의 진출이 강화되어 구지배 세력이 괴멸의 위기에 처한 나라들(특히 식민지 종속국들)에 대한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개입의 확대를 그 본질로 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트루만 독트린의 선언 이후 미국의 세계 전략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가 작업에 들어간 미군부는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게 되었는데, 4월 29일에 작성된 합동 전략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남한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의 중요도라는 점에서 고려 대상이 된 16개국 가운데 15번째를 차지하나, 원조 수원국 자체의 필요에 기인한 긴급성이라는 점에서는 5번째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점을 동시에 고려할 때 남한은 등급상 16개국 가운데 13번째 나라로 평가되었다.

여기서 이 보고서는 남한은 거의 2년 동안 미국이 소련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데올로기 전쟁을 수행하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의 패배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사활적 이해 관계가 걸린 서유럽 동맹국들에게 불신감을 조장함으로써 미국의 세계적인 위신과 안보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것이라

8) 柴田三千雄외, 『세계 현대사』, 지평, 1987, 240쪽.

는 점을 부기하고 있으며, 또 이데올로기전이 아닌 무력전의 경우 남한은 미국의 안보에 거의 전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에 대한 충분한 원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 대한 원조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⁹⁾

군부의 이러한 평가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점, 즉 전면전의 경우에 남한 내지 한반도는 군사적인 부담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군이 지상군을 주둔시켜 통제력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미군정이 제어하기 어려운 남한내의 사회 운동으로 인해 주한 미군이 불명예스러운 철군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이 활용 가능한 군사력의 상대적인 한계라는 현실과 접맥된 위에서 나온 것으로 결코 남한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은 아니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패터슨은 한국을 소련에 내어주는 것이 아닌 어떤 다른 방식에 의한 한국문제의 해결책 가운데 비록 현실적인 가능성은 낙관할 수 없지만 미국 쪽에 유리하게 한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지도 모르는 미소공위의 재개에 적극적으로 찬의를 표명했던 것이다.¹⁰⁾

1947년 3월초에서 4월 초 사이에 개최된 모스크바 외상 회담에서 소련측이 그해 5월 20일에 서울에서 미소 공위를 재개하자는 제안을 하게 됨에 따라 제2차 미소공위가 5월 21일 서울에서 열리게 되었다. 소련측은 탁치에 반대하는 정당 및 사회 단체는 공위의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모스크바 협정의 원칙론적 입장의 고수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마샬-몰로토프 회의에서 합의된 공위 속개 조건에 비춰볼 때 그러한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함으로써 공위는 다시금 교착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미국측은 우익세력을 남한에서 공위의 일차적인 협의 대상으로 설정한 위

9) FRUS, vol. I, 1947, pp. 626-628.

10) Bruce Cummings, "Introduction", Child of Conflict, Univ. of Washington Press, 1983.

에 대소협상의 원활한 진척을 위해 이승만 등의 반탁운동을 완화시키려고 시도하였다.¹¹⁾ 그러나 이승만이 공위 속개 후에도 여전히 반탁운동을 가속화시키면서, 하지의 표현을 빌리자면, 탁치라는 “단어를 공산주의 및 러시아의 통제와 같은 뜻으로 이야기하고 또 정치적으로 유치한 국민을 크게 혼란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측은 지극히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처럼 소련측의 반발과 우익의 적극적인 공위 참가 보이코트 때문에 미국은 공위가 남북한에서 독자적으로 협의대상을 설정하자는 안, 또는 남북한 양지역에서의 선거를 통해 통일 임시정부를 구성하자는 안 등을 제시하게 되나, 소련의 반대로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결국 8월말에 실질적으로 결렬되고 말았다.¹²⁾

남한 현지에서 이러한 정치적 위기를 절감하고 있던 제이콥스가 8월초에 “공산주의자의 지배를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 전역에 걸쳐 적절하게 감시되고 통제되는 다당제 비밀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한 데에서¹³⁾ 잘 드러나듯이, 미국은 삼성조정위원회 산하 한국특별위원회가 작성한 8월 4일자 SWNCC 176/30 보고서에서 향후 미국의 대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전체에 대한 공산주의자의 지배를 필연적으로 초래할 상황하에 놓여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철수할 수 없다. 그렇게 할 경우에 초래될 영향은 극동에 있어서 그리고 전세계에 걸쳐서 미국의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을 소련이 지배하도록 내어주지 않으면서 가능한 빨리 한국에서의 인력과 자금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폐기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경주되어야만 한다.

11) FRUS, vol. VI, p. 647

12) FRUS, vol. VI, pp. 683, 686, 700.

13) FRUS, vol. VI, p. 746.

고 지적하면서, 소련과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9월에 개최되는 유엔 총회에 한국문제를 이관시킬 것을 건의하고 있다.¹⁴⁾ 그리고 만일 소련이 미소 양군의 동시 철수를 제안할 경우 미국은 한국의 정치적 자유와 국가적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을 원칙적으로 철군에 동의해야 하며, 한국 문제의 유엔 이관과 무관하게 미국의 대한 원조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또 남한을 시찰중인 웨드마이어 장군의 보고서가 접수된 뒤에는 남한 단정 수립과 관련된 정치적 경제적 고려 사항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건의하고 있다.

요컨대 미소공위가 결렬되고, 남한내의 대중운동의 고양으로 인하여 정치적 위기가 첨예하게 고조됨에 따라 미국은 잠정적으로 남한만의 안정적 확보를 최우선적 과제로 하는 단정수립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곧 조속한 철군이라는 미군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까지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수반하였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9월 17일 한국독립 문제에 관한 토의를 유엔 총회의 의제로 신청하였다. 1947년 11월 14일에 유엔 총회는 이미 10월 17일에 제출되었던 미국의 결의안을 기초로 하여 한국 문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은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유엔 임시 한국 위원단의 감시 하에 실시할 것과 가능하다면 미소 양 점령군이 90일 이내에 완전히 철수 할 것을 그 주요 골자로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소련은 유엔의 결의안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미국은 남한 단정 수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결과물이 NSC 8이라는 국가 안전 보장회의에 대한 정책 결정안이었다.

NSC 8 먼저 당면한 현실 속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 코스를 세가지로 구분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로 줄이면서 인력과 자금면에서의 미국의

14) FRUS, vol. VI, pp. 783-739.

대한 관여의 해제를 촉진시키는 수단으로서 실제적이고 실행 가능한 범위 안에서 남한에 수립된 정부를 확립하는 것”의 코스를 선택했다. 이러한 선택 위에서 미국은 단정 수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의 실행을 결정하고 있었다.

- 1.북한이나 여타 세력에 의한 명백한 침략 행위가 아닌 어떠한 침략 행위에 대해서도 남한 안보의 보장을 위해 남한 경비대를 강화할 것
- 2.GARIOA 원조에 의해 남한의 경제적 위기를 완화시킬 것
- 3.단정 수립후 1948년 12월 31일까지 주한 미군을 철수할 것
- 4.철군 후에 한국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할 외교사절단을 설치할 것과, 이 사절단은 적절한 규모의 군사고문단을 포함해야 하며, 남한의 신정부 그 자체의 안정과 그 지역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할 제반 정책을 그 정부가 추구하도록 설득하기 위하여 영향력을 사용해야 할 것
- 5.한국 문제에 관한 유엔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고무시킬 것
- 6.한국의 어떤 분파 또는 여타의 어떤 세력에 의한 어떤 행동이라도 미국으로서 개전 이유로 간주될 만큼 한국 정세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이 개입하지는 말 것¹⁵⁾

우리는 여기서 해방 이후 냉전체제에 의한 미국 측의 자본주의 세계질서 체제 형성이라는 미국의 정책 목표가 일단 남한에 국한되면서 단정 수립이라는 형태를 통해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는 드디어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남북협상파가 불참하였고, 북한에 배정된 100석을 제외한 것이었으나, 198명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었다. 이에 5월 31일에는 국회가 열렸는데, 이 제헌국회는 즉시 헌법의 제정에 착수하여 7월 12일에는 국회를 통과시켰고, 7월 17일에는 드디어 이를 공포하였다.

이 헌법의 절차에 따라 7월 20일에는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15) FRUS, vol, pp.1169.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이어 행정부가 조직되고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정부의 수립이 국내외에 선포되었다. 그해 12월에 대한민국은 유엔총회의 승인을 얻어 한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적 정부가 되었고 이로 인해 분단이 완전히 고착되었다.

3. 제주의 통일정부 수립운동 형성

1) 민중운동의 전통

제주도는 섬이라는 조건과 자연적 조건과의 투쟁만큼이나 역사적으로도 육지와는 다른 특유의 정치·경제·문화를 갖는 공동체였다. 척박한 땅과 거센 바람. 바다와 더불어 사는 삶, 그것들과의 투쟁 속에서 제주 민중들은 자치적이고 자주적인 공동체를 형성해왔다.¹⁶⁾

제주도는 지주 소작관계가 약했던 관계로 직접 국가가 지주로 등장하였고, 이 결과 국가에 의한 직접적이고 제도적인 수탈이 가중되었으며, 또한 동시에 공물을 통한 자의적 수탈도 빈번하게 자행되었다. 여기에 대하여 제주도민은 직접 국가를 상대로 한 반봉건투쟁을 전개하면서 저항하였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와 제주도의 결속을 부정하는 분리주의 혹은 독립주의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삼별초 항쟁, 1813년 양제해의 조선 봉건정부 거부투쟁, 1862년의 농민항쟁(9.10.11월의 세차례의 난, 강제검의 난), 1898년의 방성철의 민중운동 등에서 조세수취 구조나 행정의 수탈체제에 대한 저항의 과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거부와 더 나아가 분리. 자치주의적 성향으로 나타난다.

반정부적, 자치주의적 특성은 다른 지방의 농민봉기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보다 과격하여 봉기민중들이 직접 치안과 행정을 담당했다는 점과, 동원규모의 대규모성, 광범위성을 지적할 수 있다.

제주도는 또한 조선의 어느 지역보다 비교적 일찍, 그리고 직접적으로 제국주의 국가의 침탈을 당했고 그것에 고통받았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16) 고창훈, 「4·3민중항쟁의 전개와 성격」, 『解放前後史의 認識』 4, 한길사, 1989

일본에 의한 어장침탈은 제주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였으며(1891년 일본민의 어장 침탈에 대한 어민봉기), 프랑스의 비호를 받는 천주교에 의한 제반 폐해도 또한 도민을 고통스럽게 했다(1901년 이재수의 민중운동). 여기에 대하여 도민은 그저 체념하지 않았고 직접적이고 때로는 간접적인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반외세 투쟁의 역사적 유산을 남기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반정부,반외세 투쟁의 역사적 유산은 일제 시대에도 단절되지 않고 이어진다. 3·1 독립운동에서부터 사회주의 사상운동, 비밀결사농민투쟁동맹운동, 적색농민운동, 잠녀항쟁 등에 이르기까지 제주 민중들의 자주적 항일운동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일제시대에 발생한 제주도의 민중운동은 비록 그 규모, 격렬성 등이 과거의 민중운동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것이었으나, 내용의 측면에서는 사회주의사상의 유입에 의하여 오히려 한 단계 고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정부, 반외세, 자치주의적 민중운동은 일제하의 민족해방운동에 내포되었고, 이를 통한 식민지하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의 경험은 역사적 자원으로서 해방후 제주도 민족운동에 연결되었다.

첫째, 조선시대의 민중운동의 반정부, 반외세, 자치주의 성향과 일제하 민족해방 투쟁을 통해 획득한 반정부,반제, 자치주의적 민족해방의식의 소유다.

둘째, 일제하 사회주의 민족해방운동의 중심인물과 해방후 민족운동의 중심인물들의 동일성, 인물사적 연결이다. 오대진, 문도배, 김한정, 김택주, 김정로, 이신우, 문재진, 강기찬 등 일제하 사회주의 민족해방운동가들의 많은 수가 해방후 제주지방 민족운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다.

셋째, 조직의 경험이다. 적색혁우동맹, 재건조선공산당제주도야체이카, 제주농민요구투쟁동맹의 조직경험은 해방후 제주도의 건준, 인민위원회, 남로당의 조직 및 활동에서 유사하게 재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조직의 경험은 해방후 건준, 인민위원회, 남로당의 조직이 도-면-리 수준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광범위한 외곽단체가 조직되는 중요한 자원이었다.

넷째, 무장투쟁의 경험이다. 비록 도민이 몇 차례에 걸쳐 전개한 투쟁들이 분산적이고 비조직적이며 자연발생적 한계에 의해 무산되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도민의 주체적 투쟁역량은 더욱 강화되었고 이것은 점차 조직적이고 집합적인 무장투쟁의 형태로 표출되었으며, 도민들은 이러한 무장투쟁을 통하여 그들의 요구를 쟁취하는 효과적인 방식을 습득하게 되었다.¹⁷⁾

이러한 역량을 지니고 해방을 맞이한 제주민중들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식민지배 잔재의 청산과 자주적 민족국가수립을 위해 인민위원회를 구성해 자치정부를 활성화시켜 나갔다.

그러나 1947년에 들어서면서 미군정은 분단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민위에 대한 공격의 강도를 심화시켜 나갔고, 이 과정에서 그동안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제주도의 움직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1947년 3·1절 기념 시위 사건과 3·10총파업을 기점으로 미군정은 그 동안 점차 가중시켜 왔던 좌익탄압을 본격화하였고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몰아갔다. 이에 대해 제주민중과 좌익은 미군정에 맞선다. 여기에 서북 청년단으로 대표되는 중앙정부측의 탄압이 중앙과 변방의 지역차별의식을 드러내며 가중되고, 제주민중은 이제까지의 온건적 자주독립국가 수립에서 반미·반정부적 저항을 펼치게 된다. 그 반미·반정부적 성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반미적 측면은 제주도의 3·1절 기념행사와 3·10 총파업에 대한 미군측의 탄압에서 비롯하였다. 당시 미군정과 경찰은 1946년 후반의 9월 총파업 및 10월항쟁의 경험을 통하여 좌파세력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극도의 과

17) 梁漢權, 『제주도 4·3 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민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한 그들이었기에 제주도에서 좌파주도의 3·1절 기념행사가 준비되고 있을 때, 그들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3·1발포사건' 발생의 개연성은 1947년에 들어 형성되기 시작했던 새로운 상황, 즉 중앙의 좌파세력과 연계된 제주도 좌파세력이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고 있었고, 이에 대응하여 미군정 및 경찰은 이미 3·1절 기념행사 직전에 1백명이나 되는 육지경찰을 파견해놓고 있었던 상황 속에 구조적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더구나 '3·1발포사건' 당시 군중에 발포했던 육지 경찰의 심리상태는 매우 '히스테릭'한 것이었는데, 경찰의 이같은 신경과민적 반응은 이미 전해 가을에 발생했던 10월항쟁 과정에서 육지경찰들이 겪었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제주도민에게는 군중집회가 평화적인 것이었다 할지라도 이미 10월항쟁을 경험했던 육지 경찰에게 그것은 극히 위험한 일로 비추어졌고, 따라서 이같은 신경과민적 심리상태 속에서 경찰발포의 가능성은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3·1발포사건'은 전해 가을 육지를 휩쓸었던 파업과 항쟁의 여파가 이제 제주도에까지 파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3·1발포사건' 발생직후 이에 대한 항의로 제주도민들은 대거 총파업에 나섰다. 물론 이같은 총파업의 감행에 제주도 좌파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주도 행정조직의 상당수 관공리와 일부 경찰까지 총파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그것이 단지 좌파세력의 선동에서만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평화적 집회에 대한 경찰 발포의 무모성에 대한 항의에서 비롯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물론 미군정도 총파업사태의 원인으로서는 경찰 발포에 대한 도민반감과 남로당의 대중선동에 의한 도민반감의 증폭이라는 두 요인을 지적하고는 있었다.¹⁸⁾ 그러나 미군정은 문제의

보다 일차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이 경찰발포에 대한 도민적 반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로당의 대중선동에만 총파업의 원인을 돌렸다. 따라서 총파업에 대한 강경탄압 정책이 뒤따랐다.

우선 미군정은 제주도에 육지 경찰을 대거 투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이미 '3·1발포사건' 전에 파견되었던 100명의 충남북 경찰력 이외에도 3월 15일에는 전남북 경찰 222명이, 18일에는 경기 경찰 99명이 제주도에 투입되었다. 총 421명에 이르렀던 이 육지 경찰력 수치는 당시 제주 경찰관 수 330명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다. 또한 제주 감찰청 내에는 육지 경찰이 중심이 된 특별수사과도 설치되었다. 뒤이어 파업 주동자에 대한 경찰의 광범위한 검거가 시행되었다. 그 결과 4월 10일 무렵 그 숫자가 500명을 넘어섰던 그들은 경찰의 매질과 고문을 거쳐 군정재판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총파업에 동조했던 제주 경찰 66명도 파면되었다.

한편 미군정은 총파업사건을 계기로 도지사 등 제주 군정의 수뇌부와 경찰 역시 대거 경질했고, 그 자리를 육지 출신 극우인사들로 채웠다. 심지어는 경찰조차도 제주도 출신이라면 믿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인사 단행의 이면에는 '좌익들의 세사인 붉은 섬'이라는 제주도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었다. 육지부에서는 1946년 10월 항쟁의 여파로 좌익의 세력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1시위나 3·10총파업의 원인은 무시한 채 "좌익이 모든 것을 선동하고 있다"라는 인식 하에 무차별적인 좌익탄압에 들어갔다.

이같은 정책은 전통적으로 육지인에 대해 배타적이던 제주도민들을 자극시켰고, 연이어 일어난 육지부 경찰대에 의한 고문 취조는 도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한마디로 주민 대부분을 좌파 성향으로 간주했던(미군정: 60-70%, 경찰 90%) 미군정과 경찰은 사태의 정당한 원인과 관계없이 제주도의

18)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1, 312쪽.

좌파 및 제주도민들에 대한 강경탄압만 시행함으로써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몰아갔던 것이다.¹⁹⁾

반정부적 측면은 서북 청년단에 대한 저항이라 할 수 있다. 해게모니 투쟁이 치열했던 해방 직후 격동기에서 일반적으로 군대와 경찰은 가장 중요한 물리력이었다. 당시 미점령군과 경비대는 수적으로 그다지 많지 않았고, 또 국내외 정세상 해게모니 투쟁에 직접 개입하기가 어려웠다. 미군정과 극우세력이 경찰을 확실히 장악했고, 또 친일과 등용에 대한 엄청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일제 경찰 경력을 가진 자들을 그대로 경찰로 중용했던 것은 이러한 사정 때문이었다.

해방당시 100여명이던 경찰은 1946년 200여명, 3·1사건 직전인 1947년 2월에는 330명, 3·1사건 후인 1947년 4월에는 경찰의 이탈 등으로 260명으로 일시 줄어들었다가 철도경찰 등이 본토로부터 대거 충원되면서 1947년 말에는 465명, 4·3사건 당시에는 480여명으로 급증했다. 해방당시와 1947년 말의 경찰 수 증가율이 남한 전체적으로는 2.5배였는데²⁰⁾ 제주도는 5배에 육박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적기구인 경찰만으로는 역관계를 역전시키고 국가를 창출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경찰관 수를 늘리는 데는 재정적인 부담등 애로가 있었으며, 더구나 테러·살인·파업깨기 등 불법성과 편파성의 시비가 예상되는 일에는 경찰을 동원하기가 부담스러웠다.

이러한 억압강화-반민족-지역감정의 선상에서 지역감정을 확대해 이용한 것이 바로 우익 청년단이었다. 우익청년단은 젊은 청년들로 구성되었기 때문

19) 역사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한국역사연구회 편, 『제주 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20) 해방당시 남한의 경찰 수는 1만2천여 명이었는데 1947년 말에는 3만여 명이였다. 임대식, 「친일·친미 경찰의 형성과 분단활동」, 『분단 50년과 통일시대의 과제』, 역사비평사, 1995, 22쪽; 박찬표,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고려대 출판부, 1997, 173쪽

에 행동력이 있었다. 한편 우익 청년단 출신들은 이후 경찰과 군대 중견 간부의 주요 충원풀이 되었다. 따라서 우익 청년단은 해방 직후라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주요한 물리력이었다.

우익 청년단의 이러한 성격은 제주도에서 가장 극단적인 양상을 보였다. 외인부대인 서북 청년단이 제주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3·1사건 직후였다. 3·1사건 이후 제주도에서도 우익세력의 강화가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는데²¹⁾서북 청년단의 투입 역시 제주도에서 우익세력의 강화를 의도한 것이었다.

3월 8일 합동조사단이 제주도에 투입되었으며 3월 중순부터 미 CIC요원들의 제주 상주가 시작되었다.²²⁾ 3월 14일 경무부장 조병옥, 15일 응원경찰이 도착했다. 조병옥은 3월 15일 제주도가 사상적으로 위험하다면서 강강대처 방침을 밝혔고, 최경진(경무부차장)은 “제주도 주민의 90%가 좌익색채”를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다.²³⁾ 16일 육지경관을 중심으로 제주 감찰청 내에 특별수사과(이호)가 설치되고 파업 가담자에 대한 본격적인 검거작전이 벌어졌다.

한편 3·1사건과 총파업이 진정되자 제주도의 수뇌부를 전면 교체하는 인사가 단행되었다. 군정장관에 스타우드 소령 후임으로 베로스 중령(4월2일), 도지사에 박경훈(제주 출신) 후임으로 유해진(4월 10일, 전북출신), 제주감찰청장에 강인수(전남출신) 후임으로 김영배(3월 31일 서울출신), 9연대장에 장창국 후임으로 이치엽(5월, 일본군 소위출신)이 임명되었다. 발포사건의 책임자로 사퇴압력을 받던 강동효(제주출신) 제1구 경찰서장은 5월 24일에야 해임되고 제주출신 김차봉(3개월, 제주출신)을 거쳐 문용채(8월 28일, 평남출신)가 임명되었다. 6월 초에는 제주 경찰 고문관 패드리치 대위 후임으로 수도경찰청 수

21)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1, 151에서 재인용.

22) 제주 현지의 CIC보고가 3월 21일부터 시작되고 있다.

23) 「漢城日報」, 1947. 3. 13.

사과 고문관 래더루가 임명되었다.

주요 인사의 물갈이를 통해 분위기를 일신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새로 임명된 인사들의 면면은 우익세력의 강화를 노린 것이었다. 군정장관 베로스는 제주도를 빨갱이가 많은 섬으로 인식하고 있던 자였으며²⁴⁾ 유해진 도지사 역시 당시 한국독립당 농민부장으로서는 극우적인 인물이었다. 특히 제주 출신을 대신하여 외지 출신들이 새로이 충원되었다. 서울에서 파견되어 수사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호 특별수사과장 역시 이북 출신이었다.

유해진 도지사는 제주도에 부임하면서 서북 청년단 단원 7명을 경호원 격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바로 이것이 서북 청년단이 제주에 진출한 첫 경우였다. 서북 청년단 제주도 지부(위원장 장동춘)가 정식 조직된 것은 1947년 11월 2일이었다. 서북 청년단 단원들은 관공서나 민가에 기거하며 경찰 보조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정규 봉급이 없었던 것은 물론 중앙에서와는 달리 후원세력조차 거의 없었으므로 “뇌물수수, 공갈, 보호 명목의 갈취와 강도단과 유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았고, “반항하는 섬주민들에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잔인하게 대했다.”²⁵⁾ 서북 청년단에게 “제주도는 조선의 작은 모스크바”²⁶⁾로서 남한에서 마지막 ‘평정’²⁷⁾ 대상지였다. 이미 앞서 살펴본 대로 서북 청년단이 남한에서 극단적인 행태로 빨갱이 사냥을 했듯이 제주도에서도 그러했다. 그런데 월남자로서 굳어진 반공의식은 남한을 평정하면서 더해졌고, 이제 제주도에서 그 하이라이트를 보였으니 빨갱이사냥도 더

24) 1946년 10월경 장창국이 9연대를 창설하기 위해 제주도로 떠날 때 경비대 사령관인 베로스를 만났는데, 베로스는 “제주도에는 빨갱이가 많으니 조심하라”고 했다고 한다. 장창국, 113쪽

25) John Merrill “The Cheju-do Rebellion” P. 155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1, 436쪽에서 재인용.)

26) G-2 P.R 1947. 11. 25. 당시 서청 제주 지부장이 제주 CIC에 한말로 자신의 주장을 CIC에 증명하려고 애를 썼다고 한다

27) 서청에서는 공산당 세력을 소탕하는 것을 ‘평정’이라고 불렀다.

난폭해졌다. 서북 청년단은 4·3발발 이전의 테러행위 등으로 제주도민의 감정을 자극하여 4·3발발의 한 요인으로 거론될 정도였다.

제주에서 우익 청년단, 특히 서북청년회는 국가 물리력을 보완하는 사설 단체 수준을 넘어 준 국가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서북 청년단은 ‘반공을 전매특허로 하는 극우’였고 ‘피비린내 나는 살상 바로 그 연속이 서북 청년단의 역사’였기에²⁸⁾ 일부에서는 서북 청년단을 ‘백색테러단’으로 규정짓기도 했다. 서북 청년단은 제주도에서 특히 ‘외인부대’²⁹⁾였기에 그 행태가 더욱 극단적이었다. 그래서 상당수의 제주도민들은 “제주도민에게 있어서 서북 청년단은 악몽의 그림자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왕년의 서북 청년단단원들도 “서북 청년단에게 있어 제주도는 악몽의 섬이었다”고 말한다.³⁰⁾

서북지역과 제주도는 전통시대부터 모두 변방지역으로서 소외된 지역이었다. 중앙권력에 대한 거부감과 배타적인 속성이 있었다. 또 봉건적 위계질서와 신분제적 차별을 미약했고 넓은 평야 지역이 없어 산물이 풍부하지도 않고 계급적 차별도 심하지 않았으므로 단결력도 강했다.

한편 양 지역은 차이가 있었다. 서북지역은 근대화가 일찍 진행되어 기독교와 천도교가 널리 전파되었고, 미국으로의 유학생이 다수 배출되었으며, 우파 민족주의운동의 메카가 되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서북세력은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중용 되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일본과의 인접으로 인하여 일본으로 다수 진출했으며, 이로 인해 지식인들은 좌파 민족주의적 경향성이 강했다. 결

28) 문봉제, “서북청년회-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중앙일보』, 1972. 12. 21

29) 서청은 남한의 어디에서나 외지인이었지만 특히 제주도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당시 서북출신으로 제주도를 여행했거나 제주도 출신을 접해본 경험을 가진 이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제주도의 방언이 특히 심해서 서북 출신들은 제주도에 와서 의사소통에도 상당한 애로를 느꼈을 것이고, 같은 민족구성원으로서 동질감을 적게 가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점이 제주도에 서청이 더 잔인한 행태를 보인 한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30) 이경남, 『분단시의 청년운동』 상, 삼성문화개발, 1989, 122쪽.

국 4·3사건은 양 세력과 노선의 충돌이란 측면이 기본적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서북(월남)과 제주도는 극단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었다. 그 결과 제주도에서의 충돌과정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피의 보복이 이루어졌다. 분단-냉전-전쟁으로 갈등은 더 심화되었고, 특히 월남 청년들로 구성된 서북 청년단은 이북에서 피해를 당했고 또 피해의식 이상으로 극단화되어갔다. 결국 서북 청년단은 우파노선을 거칠게 대표했던 것이다.

한편 극단적인 반공 외인부대로서의 서북 청년단을 제주도에 투입하고 또 준국가 기구화시켜 폭력을 사주.방조한 미군정과 극우세력에게 서북 청년단은 철저히 이용당한 측면이 있었다. 서북 청년단이나 제주도나 일종의 희생양이었다.

이렇게 미국과 서북 청년단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탄압으로 제주도민들은 빨갱이 사냥의 표적이 되었고, 특히 젊은이들은 공산주의자 검색이라는 명목하에 테러의 주요대상이 되었다. 이때 많은 좌익운동가들이 탄압을 피해서 일본으로 빠져나갔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한라산으로 입산하기 시작하였다.

경찰, 서북 청년단의 만행과 더불어 제주도민을 궁지로 몰아넣은 것은 굶주림이었다. 미군정의 곡물수집정책은 흉년에 시달리는 도민들을 더욱 괴롭혀 곳곳에서 미곡수집반대투쟁이 일어났다.³¹⁾ 이 시기부터 반미투쟁의 성격이 들어 있는 전단³²⁾이 살포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3·1시위 이후 짧은 시기 동

31) 1947년 7월 말 한림면 명월리, 8월 8일 동광리 등 부락마다 곡물수집에 반대하여 마을 주민과 당국이 동원한 우익청년단의 충돌이 있었다. 특히 이 시기에 뿌려진 삐라에 가장 많이 거론된 내용이 '보리공출문제'일 정도로 강제적인 곡물수집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G-2. P.R 1947. 8. 20.)

32) "조선을 조선인으로부터 빼앗아 제멋대로 하려는 미군을 몰아내자. 무기를 가지고 민중을 탄압하는 경찰을 타도하자. 조선민족의 흠혈귀, 우익 추종자를 저주하자"(G-2. P.R. 1947. 8. 8.)

안에 미군정이 제주도에서 행사했던 폭력의 정도와 그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인식의 전환정도를 의미한다.

2) 해방후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 활동

해방을 맞이한 제주민중들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식민지배 잔재의 청산과 자주적 민족국가수립을 위해 인민위원회를 구성해 자치정부를 활성화시켜 나갔다.

육지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제주도 지역의 인민위원회의 영향력은 강했다. 그것은 커밍스의 지적에 따르면, 해방후의 인구의 급속한 증가, 일제 통치와 미군정 통치 사이의 비교적 긴 공백기, 통신 및 교통의 불편, 농민의 급진적 역사, 비교적 분화된 직업구조, 지배적인 좌파의 온건한 정책 등 인민위원회 성장의 최적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³³⁾

따라서 미군정은 현실적으로 압도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인민위원회와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제주지방에서는 미군정이 인민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의 통치기구로 인정, 치안대원을 소집하여 치안협조를 구했다. 이렇게 제주도 건준·인민위는 미군정의 정책으로부터 자율적이었으며 제주민중의 완전한 지지 속에 놓여 있었다.

제주지방의 도·읍·면 건준과 인민위의 인물들은 지방민들에게 친숙한 토착민들이었다. 이것은 건준·인민위 지방조직이 자발적 노력으로 이루어진 권력기구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위원장, 부위원장 등 대표급 인물은 사회적 경륜을 쌓은 40-50대 인사들이며, 마을유지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의 직업분포도 농업, 어업, 중소상인, 관료 등 다양하였다. 이 가운데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협조하였던 사람도 있었는데, 김봉규·오용국은 일제하에 면장을 지냈으며 현

33)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김자동 역, 일월총서, 1986, 353-354쪽.

중흥·조범구·고군철은 일제시기에 면 회계업무를 맡던 면서기를, 그리고 운영하는 일제말기 모슬포 레이다를 지키는 모슬봉 감시소장을 지냈다.

일부 면의 경우에는 건준이 인민위로 개편되면서 보수적 인사들이 탈락하고 진보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는 명망가를 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이처럼 일제관리조차 임명하였던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언에서 시사 받을 수 있다. 공산당 대정면책이었던 이운방씨는 “우리는 정책적으로 온건하고 지방유지였던 우영하를 인민위원장으로 추대했지. 이는 다양한 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여기서 인민위원회가 광범한 민중을 끌어들이기 위한 통일전선적 조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제주민에 의해 구성된 건준·인민위원회 활동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치안유지 활동이다. 여기서 치안대는 일시적 조직으로 대원들은 청년동맹이 탄생되면서 거의 통합 또는 공존하게 되는데 치안대의 기능은 대부분 청년동맹에서 수행한다. 해방 후 일제 경찰이 자취를 감추면서 도·읍·면·리의 건준·인민위 산하에 청장년들로 구성된 치안대 또는 보안대가 구성되어 사회질서 유지, 친일파 처단, 일본 패잔병의 횡포 근절, 자체방법등의 활동을 하였다.

민중들에게 호응을 얻었던 또 하나의 인민위 활동으로는 적산관리를 들 수 있다. 일제시대 제주에는 주정공장과 제약회사, 양말공장, 축산물 및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통조림, 패구공장 등 72개소의 화학, 제조업 작업장이 일본인에 의해 가동되고 있었다. 8.15가 되자 이들 공장에는 자주적 관리를 위해 각 단위 관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후 건준·인민위가 결성되면서 이들은 산업부와 협의하여 관리를 해나갔다.

또다른 종류의 적산으로 군수품 일부는 건준·인민위에 의해 접수 불하되

었다. 한림면 명월인민위에서는 일본군이 쓰던 식기 및 일용품을 접수하여 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준 사례가 있다.³⁴⁾ 안덕면 창천리에서도 일본군이 쓰던 군수품을 관리하게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던 내용이 나온다.

1. 일본군 재산은 우리의 재산이다. 누구든지 매매할 수 없다.
2. 금일 이전에 매매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입자에게 원가를 돌려주고 재산은 회수한다.
3. 금일 이후에 매매한 재산은 일본군이 철수한 후 몰수한다.

창천 인민위에서는 위 3항의 결의문에 따라 보초를 세워 일본군의 동태를 파악하고 일본군 철수 후 그 목재로 국민학교를 설립하였다.³⁵⁾

그러나 미군정이 제주도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미군정은 1945년 12월 1일 재산관리과를 신설하여 적산의 접수·관리·처리를 독단적으로 수행했으며, 1946년 2월 신한공사라는 군정청 직속의 특별기관을 설립하여 귀속재산을 관리하였다.

이외에도 인민위의 주된 활동으로는 자치행정기능을 들 수 있다. 인민위는 1945년 9월 말경 각 읍·면대표들이 모여 안세훈을 도사로 선출하고 행정력을 완전히 이양 받으려 했으나, 미군정이 이 요구를 수락하지 않아 행정기관을 접수하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지방에 행정기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주읍에서는 건준·인민위 주도하에 시내청소 및 도로정리를 하였던 사례가 있으며, 남원면 수망리에서는 마을 공동으로 길 닦기를 하였다. 한림·금악리에서는 체육대회·연예대회가 인민위 주도로 개최되었고, 일부 마을에서는 축산·일반 농사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다.

34) 오희규(한림면 명월 치안대 부대장, 90년 채록)증언

35) 창천리 성청회, 『창천내』, 1987.

인민위에서는 산하에 소비조합을 두어 공산품, 생활필수품을 공급하기도 하였다. 고경흠씨의 증언에 따르면 소비조합에서는 북에서 사온 비누(상품: 인민), 비료(상품: 함흥 8호) 등을 판매하였다고 한다.³⁶⁾

인민위원회의 구성과 병행하여 민중이 주력한 것은 자주교육운동을 통한 사상과 문화의 보급이었다. 일제시대에는 농업학교가 하나밖에 없었던 제주도에 오현중·제주중·제주여중 등을 창설하는 것을 필두로 1945년부터 27개 학교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문맹퇴치를 위한 무수한 강습소를 세우고 「제주신문」도 펴냈다. 바로 이러한 교육운동과 문화운동이 제주도 인민위원회와 민중을 연결하는 공간이었고 민중의 자치의식과 민족의식을 드높이는 근원으로 작용하였다.

자주교육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조천중학원이었는데 1946년 가을에 생겨 5·10선거때 강제폐교를 당할 때까지 진보적인 지식인과 지역의 유지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조천중학원의 경우 교사 13명이 전부 일본에서 귀환한 유학생이었는데 이덕구(역사), 김동환(영어), 윤일?(국어), 김민학(수학), 현복유(사회) 등이었다. 당시 주야간 합쳐 12000여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았다. 수업은 『자본론』과 『공산주의 운동사』를 교재로 할 정도로 대학강의 수준이었고, 선생님 모두가 4·3항쟁시 항쟁지도부에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민중과의 연대투쟁을 전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³⁷⁾

커밍스의 분류에 의하면 제주지방은 1946년 현재 15세 이상 남자인 경우 학생 및 전문직 학교 졸업자 비율이 42.4%로 전국 평균치 27%보다 훨씬 웃돌고 있다.³⁸⁾ 이렇듯 학습·학교교육·언론 등을 통해서 공산주의 이념이 확대

36) 고경흠(한림, 당시 치안대장, 청년동맹위원장, 90년 채록) 증언.

37) 고창훈, 「4·3민중항쟁의 전개와 성격」, 『解放前後史의 認識』 4, 한길사, 1989, 258쪽.

38)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김자동 역, 일월서각, 1986, 433쪽.

재생산되었다. 이는 좌익의 기반구축 및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설혹 이년의 확대재생산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대중동원에는 이같은 수단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완전한 해방을 이루지 못하고 미군정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행정,경제적인 측면 못지 않게 두드러진 것은 정치적인 활동이었다. 이 시기 인민위로 대변되는 제주도 좌익세력의 주요 정치활동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지지와 입법의원 선거투쟁이었다.

조선공산당은 우익의 반탁투쟁을 민족 분열적 행위로 규탄하고 민족통일전선을 주장하면서 적어도 1946년 1월 1일 오후 2시까지는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월 2일에 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에서는 모스크바삼상회의의 결정은 조선민족해방을 확보하는 진보적 결정으로서 이 결정을 전면적으로 지지한다고 표명하였고, 같은 날 조공은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이를 지지하였다. 이와 같은 신탁통치에 대한 조공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로 인하여 지방에서는 인민위원회나 공산당 조직에서 주관하여 반탁대회와 삼상회의 결정 지지대회가 잇달아 일어나는 등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다.³⁹⁾

제주도에서도 중앙의 결정과 달리 1946년 1월 5일 인민위원회 주도하에 각 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신탁반대궐대회가 열렸다. 제주읍내에서도 2만 관중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북국민학교 교정에서 반탁대회가 열렸다. 중앙에서는 이미 3일 전에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 지지대회를 가졌는데도 이틀 후에 제주도에서 반탁대회가 열린 것은 삼상회의의 긍정적인 부분이 알려지지 않고 다만 4대 강국에 의한 신탁통치 5년제 실시라는 사실만이 전해졌기 때문이다.⁴⁰⁾

이후 인민위, 조공 제주도당을 비롯한 제주도 좌익세력은 삼상회의 지지운

39)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1, 317-318쪽.

40) 이운방 증언.

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처음에는 도민들에게 혼선을 가져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나, 부락 내 세포원을 통한 해설작업 등의 노력으로 삼상회의 결정 지지운동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갔다. 이 결과의 이면에는 삼상회의 결정 그 자체보다 인민위로 대변되는 좌익세력에 대한 제주도민의 신뢰감이라는 부분이 더 많이 작용하였다.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10월 인민항쟁'에는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그해 10월 말에 있었던 입법의원 선거에는 참여하였다. 1946년 10월 말 입법의원 선거를 군정연장의 음모이자 남조선 단정수립 기도라는 이유로 중앙의 좌익세력이 전면적으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경우는 참여를 결정하고 2명의 좌익 인물을 당선시켰다.

제주도 좌익세력이 중앙의 선거 거부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양해도 없이 선거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이운방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⁴¹⁾

미군정의 하수기관인 입법의원의 창설에 반대하고 따라서 의원선거 역시 보이콧한다는 것이 우리 진영의 기본 입장이었으나, 우리 제주도에서는 뜻하는 바 있어 이 기회를 역이용하여 우익의 진출을 막고 선거를 무효화함과 동시에 우리의 힘을 과시하는 효과를 거두어보자는 의미에서 입법의원 선거투쟁에 돌입했었다. 서울 중앙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의 진의를 해명하면 대체로 양해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즉 인민위를 비롯한 제주도 좌익세력은 입법의원 참가가 그것의 창설을 반대한다는 근본원칙에 위배됨이 없이 다만 선거투쟁에 국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의 보이콧과 다를 것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제주도의 입법의원 선거 참여는 조공 제주읍당의 건의로 시작되었다. 제주읍당이 대정면당에 선거 참여를 주장하는 문건을 보냈고, 그로부터 며칠 후가 되자 도당으로부터 읍당의 것과 마찬가지로 입법의원 선거투쟁에 착수하

41) 이운방, 「제주도에 있어서의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선거투쟁'에 관하여」 『4·3長征』 4, 백산서당, 1991, 70쪽.

라는 지령이 하달됨으로써 제주도에선 선거투쟁에 들어가게 되었다.

입법의원 선거는, 선거방법과 선거일은 정하지 않은 채 지방 실정에 맞춰 지방장관에게 일임되었는데, 선거는 10월 28일에서 30일 진행되었다.⁴²⁾

제주도에서는 10월말에 실시되어 좌익계 인물인 문도배(구좌면 인민위원장)와 김시탁(조천면 인민위 문예부장)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1946년 12월 10일까지 마감된 입법의원 등록을 하지 않고 12월 12일 입법의원 개원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민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상회의의 충실한 수행만이 민족독립의 유일한 길”이라며 사퇴해 버렸다.⁴³⁾

제주도 좌익세력의 입법의원 참가는 우익의 진출을 막고 선거를 무효화하는 동시에 좌익의 승리가 전 도, 나아가 전국에 확산되는 선전효과를 거두자는 데 있었다. 그래서 즉각적인 거부선언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제주도 인민위는 2, 3일의 시간여유를 두어 선전효과를 거두는 것과 중앙에 진의를 해명함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당선 거부를 발표하는 이중의 효과를 기대하였다.⁴⁴⁾

이 입법의원 참가 목적은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11월 4일의 입법의원 개원일이 연기되는 바람에 두 사람의 상경이 늦어졌기 때문에 좌익도 입의에 참가했다는 미군정과 우익 측의 선전을 가져오는 역효과도 초래하였다.

그리고 조직의 정식계통으로 볼 때 이것은 당조직의 이상을 뜻하는 것으로 중앙이 제주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⁴⁵⁾ 당중앙의 거부 방침에

42) 「漢城日報」, 1946. 10. 25.

43) 김천영, 『연표한국현대사』 I, 한울림, 1985, 507쪽.

44) 이운방, 앞의 글, 67쪽.

45) 남로당의 당규율은 “당원간의 횡적 연락을 엄금”하고 “하급은 상급에 복종하고 전 당원은 중앙에 복종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박일원, 『남로당의 조직과 전술』, 세계, 1984, 63쪽)

도 불구하고 입법의원 참가라는 제주도당의 이러한 결정은 조직 규율상 항명에 가까운 것으로 일종의 반당적인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제주도민의 건준·인민위원회의 성격을 살펴보면 우선 그 구성원이 제주민을 반영하는 토착적 인사와 일제하 민족해방 운동을 했던 인사들로 구성되어 좌우연합적인 온건적 성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좌우합작적 온건성과 미군정의 온건성으로 중앙의 정책과 분리되어 있었다. 따라서 제주민은 해방후 식민지잔재와 반봉건을 청산하고 자주적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해 건준·인민위원회를 통해 자치적으로 치안유지, 적산활동, 자주교육운동, 정치활동 등의 노력을 했다.

4. 제주 4·3항쟁의 발발과 단선반대 민중운동

1) 제주 남로당 세력의 성향

제주에서의 건준은 좌우 세력이 총망라한 조직이었기에 좌우 세력의 갈등 관계가 잠재화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나, 인민위원회로 재편되면서 점차 좌우의 갈등관계는 표면화되고 결국 인민위원회에서는 조익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인민위원회는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좌익정당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갔다.

조선공산당 전남도당 제주위원회 조직은 1945년 10월 초 제주읍의 한 민가에서 결성되었다.⁴⁶⁾ 이날 회의에는 김정로, 조몽구, 문도배, 김유환 등 일제하부터 사회주의 운동을 계속해왔던 20여 명의 인물이 참석하였다. 회의는 김정로가 주도하였고 당 지도부의 구성에 관해서도 김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각 참가자는 각 면 지부를 결성할 것을 결정한 다음 산회하였다.

당시의 조직 구성과 주요 간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도당서기는 김정로였고, 남로당으로 개편되어서도 당을 주도해 나갔다고 한다. 김정로는 제3차 조선공산당사건에 연루되어 투옥된 바 있으며 8.15를 맞이하여 목포에서 건준결성에 참가한 후 오대진⁴⁷⁾과 함께 제주도로 돌아와 제주도 건준 결

46) 제주도당의 결성 시기에 관해서 김봉현·김민주는 저서에 1945년 12월 9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앞의 책14쪽)그러나 조공 제주도당 결성 당일날 직접 참석했었던 이운방(이후 남로당 대정면책)은 10월초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운방 증언) 이운방은 1909년 대정읍 모슬포에서 태어났다. 1933년 일본으로 건너가 1940년까지 7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면서 노동운동에 관계하다가 동년 12월에 귀향하였다. 그리고 8.15이후 대정면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 선전부장을맡아 활동하였고 10월초에 조공 제주도당 결성 당일 직접 참석하였다. 1946년 말 남로당 대정면책으로 활동하다가 1947년 3.1기념대회 이후 검거되어 목포형무소에서 10개월형을 받았다. 1948년 1월말에 만기 출소하여 제주로 돌아왔다. 4.3이 발발하면서 1948년 7월에 제주를 떠나 일본으로 갔다가 1979년에 귀향하였다.

47) 오대진(吳大進)은 1898년 대정면 하모리에서 태어나 1927년 2월 조공에 가입하였다.

성을 주도하였던 인물로 당과 인민위원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었다.⁴⁸⁾

이밖에 조공 제주도당의 주요 인물로는 안세훈(조천면)⁴⁹⁾, 김유환(조천면), 문도배(세화면), 조몽구(제주읍)⁵⁰⁾ 오대진(대정면), 김한정(안덕면)⁵¹⁾, 이신호(대정면)⁵²⁾, 이운방(대정면), 김용해(애월면), 김정로(제주읍), 문재진(제주읍), 부

1932년 '개건조공 제주도 야체이카사건'으로 4년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1930년대 초반에 제주도 내의 소년, 청년, 농민 사회운동을 직·간접적으로 지도하였다. 인민위 보안 부장이었던 김한정, 대정면 인민위 부위원장 이신호, 문교부장 문달진 등 우수한 제주도 사회주의 활동가들이 이때 오대진의 지도하에 있을 정도로 오대진은 제주도 민족 해방운동의 선구자격인 역할을 했다.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자 출옥 후 목포를 오가며 장사를 하다가 목포에서 8.15를 맞게 된다. 김정로, 김용해 등과 제주도 건준 결성을 주도하여 건준과 인민위 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목포를 오가면서 활동했기 때문에 1947년 2월 경에 있었던 하귀회의에서 당활동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제명 당하였다. 1949년 일본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사망하였다.

48) 김정로(金正魯)는 1907년 제주읍 출생으로 1928년 8월 제주도 야체이카사건으로 일제의 검거를 피해 일본으로 건너갔으나 일본에서 체포되어 6개월형을 살았다. 석방된 이후에는 목포에서 생활하다가 해방을 맞이하였다. 김정로는 전남 목포에서 건준 결성에 차명한 후 건준 조직의 임무를 띠고 제주도로 들어와 제주도 건준의 결성을 주도하였다. 전남 건준에서 김정로를 보낸 이유는 30년대 중후반부터 일제의 강고한 탄압을 받은 제주도의 운동가들이 운동을 그만두거나 일제와 타협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로는 그래도 변절하지 않은 채 해방을 맞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나이나 경력으로 보아서는 선배인 오대진이 주도해야 했지만 오대진은 1932년 해녀사건 이후 일제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

49) 안세훈(安世勳)은 1891년 조천면(당시는 신좌면) 조천리에서 태어났다. 안요검과 안요해는 그의 또다른 이름이다. 1936년 조천리의 김시용, 김유환과 함께 공산주의 사상을 학습하여 그 후 사상범으로 징역 6개월을 살았다. 8.15후 보안대장을 지냈고 민전공동 의장으로 3.1대회를 주도하였다. 이후 서울로 도피하였다가 월북, 해주 인민대표자대회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된다. 한국전쟁 당시 제주도 조직재건의 사명을 띠고 남파되었으나 제주도로 내려가지 못하고 광주에서 활동하다가 1953년 휴전 무렵에 도피 도중 광주 부근 굴에서 사망하였다. 남로당 제주도 위원회 초대 위원장이었다.

50) 조몽구(趙夢九)는 일제하에서는 오사카조선노동조합에서 활동하였다. 남로당 초대 조직 책임이었으며 안세훈 다음에 2대 도당위원장을 맡았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4.3발발 당시에는 입산하지 않고 마을에 남아 있으면서 활동한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확실하지 않다. 1951년 9월 경 부산에서 체포되었다.

51) 김한정(金漢貞)은 1894년 대정면 가파도에서 태어났다. 1921년부터 가파도 신유의숙에서 교편을 잡으며 셋별소년단 등 소년운동과 야학운동에 힘썼다. 1932년 '개건조공 제주도 야체이카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때의 옥중투쟁으로 유명해졌다. 8.15이후 인민위 보안대장을 맡았다. 1946년 10월 미군정의 재검거를 피해 배를 타고 도피중 삼천포 도중에서 침몰하여 사망하였다. 제주도민장으로 장례식이 치러졌다.

52) 이신호(李辛祐)는 대정면 하모리에서 1900년에 태어났다. 오대진의 영향으로 1920년대

병훈(조천면), 송태삼(서귀포)⁵³⁾, 이도백(서귀포)⁵⁴⁾등을 들 수 있다.

조공 제주도당 조직원들은 건준과 인민위원회 조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제주도당은 10월초에야 결성되었기 때문에 9월 10일에 조직된 건준과 초기 인민위원회(9월 22일 결성) 활동에는 조직적 차원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참여하였다. 사회주의 활동가들은 건준이나 초기 인민위 활동에 개별적으로 참여하였지만 그들간에는 이미 이념상의 또는 활동경력에서의 공통점이 많았기 때문에 쉽게 결합할 수 있었고, 그들의 의견은 보다 강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가들은 건준 조직과 인민위 조직에서 보다 확실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도당이 결성된 이후부터는 인민위원회에 프락치를 파견하는 형식으로 당의 재돌격을 관청하며 인민위 활동을 주도해 나갔다.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통일전선적 조직체로 구성된 가운데에는 당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유지, 명망가, 심지어는 전직 일제 관료들까지 포용한 다양한 성분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민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이끌어 나갔던 세력은 조선 공산당이였다. 도 인민위 위원장 오대진을 비롯하여, 총무부장 김정로, 치안부장 김한정, 산업주장 김용해, 집행위원 김시탁, 조몽구, 현호경 등 도인민위의 주요 간부 대부분은 조공 위원이 맡고 있었다.

조공 제주도당은 1931년 5월 강창보, 이익우, 오대진, 김한정 등에 의해 조

항일단체인 모슬포청년회에서 활동하였고, 1925년 제주청년연합회 집행위원이었다. 1931년 “농민테제사건”에 연루되었고, 1932년 야채이카사건으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8.15이후는 대정면 인민위 부위원장을 지냈고, 3.1사건으로 징역 6개월을 언도받았다. 출옥 후 활동을 안했으나 1948년 10-11월경에 집앞에서 피살되었다.

53) 송태삼(宋太三)은 1945년 당시 34세로 일제하에서는 1935년 적색농조에 관여했었고, 남로당 서귀포 당책이었다.

54) 이도백(李道伯)은 남로당 도당부의 거물로 서귀포에서 활동하였다. 1947년 3월 파업투쟁위를 주도하였고, 1950년 8월부터 서귀포 지역 토굴에서 본토와 접선을 시도하던 중 1954년 3월 15일 체포되었다.

직되었다가 1932년 ‘해녀사건’이 일경에 적발되어 해체되었던 재건조선공산당 제주도 야체이카의 후신으로 볼 수 있다. 제주 야체이카는 1931년 5월 결성모임에서 “찬제 조선공산당은 존재하여 있지 아니하나 장래 재건이 되면 정식으로 연락을 취할 것”을 전제로 하여 당의 세포를 결성하고 아울러 당 규율 및 입당 자격을 정하였다. 그리고 각 면, 각 리 단위의 야체이카를 구성하여 중앙 야체이카의 통제하에 두었다.⁵⁵⁾

야체이카사건으로 투옥되었던 김한정, 오대진, 문도배, 오문규, 김유환, 고운선, 이신호 등은 8·15 후 조선공산당 재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야체이카조직, 즉 각 지역의 당 세포가 8·15후 당의 재건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는 검증을 필요로 하지만 인민위원회, 당의 외곽조직인 청년동맹 등 각종 단체가 해방을 맞아 신속히 결성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조직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⁵⁶⁾

재건된 조공의 당원 가입은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엄선되었다. 당원이 되려면 일단 친일전력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했다. 그리고 정당원 2명의 보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통과한 다음에도 6개월 동안 준당원의 과정을 거쳐야 정당원이 되었다. 따라서 당원 수는 엄격히 제한되어 결성 직후에는 100여 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⁵⁷⁾

그러나 조공 제주도당은 그 이후에도 당원을 급격히 확장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 제주도에서는 사회주의 세력 이외의 정파는 미약했고 일제하 민족해방운동을 주도했던 사회주의 세력은 도민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공 제주도당은 조선 공산당의 이름을 내세워 활동

55) 이기하, 「해방 전 정당·사회단체연구 참고자료」, 국토통일원, 1976, 183쪽.

56) 박찬식, 「일제하 제주도 민족해방 주도세력의 성격」, 제주 4·3연구소, 『제주항쟁』 1991, 120-124쪽 참조.

57) 이운방 증언

하기 보다는 대중조직인 인민위원회 활동에 주력하였다.

인민위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인민위활동의 일익을 담당한 것은 청년조직인 '청년동맹 제주도위원회(위원장 문재진)'⁵⁸⁾였다. 청년동맹은 1945년 9월말에 결성된 건준 청년동맹이 중앙의 '전국청년단체총동맹'에 가입함에 따라, 건준 청년동맹을 모태로 하여 1945년 12월 10일 결성되었다. 청년동맹은 도내 12개 읍.면에 전부 면 청년동맹을 결성하였으며, 169개 부락에 거의 리 지회를 두고 있었을 정도로 단일조직으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수의 맹원을 갖고 있었다.⁵⁹⁾

청년동맹은 겉으로는 독자적인 대중단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인민위원회의 지시와 통제를 받았다. 즉 중앙과 도 청년동맹의 통제보다는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의 통제를 강하게 받았다. 인민위원회의 실질적 활동은 주로 청년동맹을 통해 이루어졌다.⁶⁰⁾

좌익세력이 벌인 항일운동의 조직적 경험은 8.15후 건준과 인민위가 신속하게 결성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다. 도민들은 사회주의라는 사상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으나, 좌익 운동가들의 항일운동은 높이 평가하였다. 혈연과 지연으로 얽힌 제주사회의 특수성 또한 좌익 운동가들의 개인적인 명망성을 그들이 속한 조직에 대한 도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나타나게 했다.

그리고 8·15 직후 6만 명에 이르는 일본으로부터의 귀환자는 좌익세력의 지지기반이 되었다. 일본에서 저임금과 민족차별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으면서 계급의식을 갖추고 노동운동에 직접 참여한 귀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전

58) 문재진은 해방 당시 34세로, 1928년 제주청년동맹이 이끄는 셋별소년단의 단원이었다. 서울중앙고보에서 '식민지교육반대 동맹휴업' 주모자로 3학년 때 퇴학을 당했고 '재건조공 제주 야체이카사건'으로 징역 1년을 살았다.

59) 제주4.3연구소 『4.3장정』 5, 33쪽

60) 이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인민위와 청년동맹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위의 책 36쪽)

형적인 농촌사회였던 제주도에 노동자적 의식이 퍼지고 일정 정도 사회주의운동이 확장되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제주도 좌익세력은 계급운동을 벌여나가기 보다는 인민위원회라는 통일전선적 대중조직을 통해서 자주적 국가수립이라는 당면과제를 이룩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제주도 좌익세력의 운동노선은 사회주의 운동가들의 항일운동 경력과 함께 이들의 활동이 제주도민의 지지를 받게 되는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

조공 제주도당은 1945-46년 말까지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인민위원회 활동에 주력하고 있었다. 그런데 1946년 12월 남로당 제주도당으로 개편된 후에는 이전의 조공 때와는 달리 표면에 등장하고 있다. 이는 남로당이 합법적 정당으로 미군정에 등록하면서 대중정당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공 제주도당은 1946년 11월 23일 중앙에서 공산당, 인민당, 신민당 등 3개 좌익정당의 통합으로 '남조선로동당'이 결성됨에 따라 조공 제주도당이 '남로당 전남도당부 제주도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조직되었다. 그러나 제주에서는 조선공산당을 제외한 다른 좌파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중앙에서처럼 노선대립이나 정당조직 간의 통합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선 공산당 지부 조직이 중앙의 정치변화에 맞춰 남로당으로 개편되는 명칭변경 과정만을 거쳤다.

조공 제주도당 당원들은 1946년 12월 조천면 김유환의 집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남로당 전남도당부 제주도위원회'를 결성하였다.⁶¹⁾ 제주도당의 위원장은 안세훈, 조직책은 조몽구였다.⁶²⁾ 이 시기 조직과 구성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으나 남로당으로 개편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조공의 지도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당의 주요 간부들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3·1시

61)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1, 전예원, 1994, 536쪽.

62) 이운방, 「4·3항쟁에 관한 일고찰」, 제주4·3연구소, 「4·3장정」 3, 백산서당, 1990, 104쪽.

위 이후 당지도부의 검거로 조직개편이 불가피해지면서부터이다.

남로당은 10월 항쟁의 여파로 인한 당조직의 정비와 미소공위 재개에 대응할 당세 확장을 위해서 많은 인적자원이 필요하였다.⁶³⁾ 제주도당 또한 당의 주요 활동이 대중조직사업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1947년 초에 당원배가운동이 전개되었는데 그것은 민전, 민청, 부녀동맹결성 등 외곽조직의 확산과 함께 추진되었다. 이 무렵 남로당 대정면책을 맡았던 이운방의 증언을 따르면 “대정면의 경우 당원이 25-30명에 불과했으나 1947년 3·1대회를 앞둔 2개월 전 60명 정도로 늘어났다”고 한다. 당원배가운동은 당원 한사람이 비당원 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책임제로 진행되었는데 한달 정도의 짧은 기간동안에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당원배가운동이 수월하게 이루어진 주된 요인은 미군정의 실정에 실망한 일반 대중이 그 대안을 남로당에 찾았기 때문이다. 1947년 1단계 당원배가운동 때만 하더라도 사람 늘리기 식이 아니라 사상이 확실한 사람을 입당시켰기 때문에 당원확장운동이 당의 질적인 저하를 불러일으키진 않았다.⁶⁴⁾

제주도 민주주의 민족전선은 1947년 2월 23일 도·읍·면 대의원 300명과 200명의 도민이 모인 가운데 조일구락부에서 결성되었다.⁶⁵⁾ 이때 선출된 민전 간부진은 위장단에 안세훈, 이일선(관음사 주지), 현경호(제주중교장), 부위원장 김용해, 김택수, 김상훈, 오창훈, 사목구장과 조직부장에 김정로, 선전부장 좌창림, 문화부장 김봉현 외 31명의 집행위로 구성되었다.

서울에서는 민전이 1946년 2월 15일에 결성⁶⁶⁾되었기 때문에 제주도 민전결성은 중앙에 비해 1년이 늦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에서는 좌익세력 이외의 다

63) 김남식, 「남로당 연구」 I, 돌베개, 1984, 276쪽.

64) 이운방 증언

65) 「제주신보」, 1947, 2, 26.

66) 송남헌, 「해방 3년사」 I, 까치, 1985, 287쪽.

른 세력은 미약했고 무엇보다도 인민위가 민족민주세력을 망라한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에서의 민전결성은 중앙의 정치변화에 맞추어 명칭만 변경한 것에 불과했다. 민전결성 이후에도 면·리단위에는 인민위가 계속 존재한 곳이 많았다.

남로당의 외곽단체로 대중투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조선민주청년동맹은 청년단일전선을 목표로 중앙에서는 1946년 4월 25일 결성⁶⁷⁾되었지만 제주도에서는 9개월 후인 1947년 1월 12일에 결성되었다.⁶⁸⁾ 제주도 민청은 1947년 1월 12일 오전 10시 조일구락부에서 결성되었는데, 도 민청은 중앙 민청의 강령을 채택하고 위원장에 김택수(金澤銖)⁶⁹⁾를 선출하였다.⁷⁰⁾ 청년동맹을 기반으로 1947년 1-2월에 걸쳐 결성된 읍·면 민청은 기존의 리 청년동맹을 바탕으로 곧 마을까지 뿌리를 내린다.

그러나 민청은 인민위원회가 미군정의 인정을 받지 못함으로써 사실상의 활동이 쇠퇴됨에 따라 인민위원회의 통제를 받던 청년동맹과는 달리 자체적으로 도-읍-면-리-반으로 이어지는 조직체계를 구축하였다. 각 면 민청위원장들도 청년동맹보다 진보적인 인사로 바뀐다.

그러나 민청은 미군정이 1947년 행정명령 제2호로 민청을 불법단체로 지목하여 해산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1947년 6월 6일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으로 재조직하게 된다. 제주도에서도 민청이 조직된 지 6개월만에 해산

67) 위의 책, 308쪽

68) 「제주신보」, 1947. 2. 26.

69) 김택수는 송중현, 강창보 등과 함께 제주도 민족해방운동의 선구자로 유명하다. 1925년 결성된 사회주의 조직인 신인회 간부로 1925년 직후 조선공산당에 가입하였다. 1925년 4월 '제주도 신인회 강령'이 문제가 되어 송중현과 같이 검거되어 6개월형을 살았다. 1927년 조선공산당 제주도 야채이카 조직원이었으며, 1928년 제주청년동맹에서 일하며 청년운동을 지도하였다. 1947년 47세의 나이로 제주민청위원장이 되었으나 이후 일본으로 밀항하여 1948년 2월 당에서 제명을 당한다.

70) 「제주신보」, 1947. 1. 10, 2. 16.

되어 1947년 7월 경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제주도위원회(위원장 강대석)로 개편되었다.

민청과 민애청의 주요 간부들은 대부분이 남로당원으로서 민청은 남로당의 강력한 통제를 받았다. 이후 이들은 4·3항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김평원은 도 군사부 간부로, 송태삼은 서귀면 군사부장, 강대석은 남로당 청년부 책임자로 각각 활동하였다. 조천면의 김완배는 당 농민부장, 김대진은 인민유격대 부사령관이었으며, 김의봉은 유격대의 중심인물로서 1949년 이덕구가 체포된 후 유격대 사령관이 되었다. 특히 민애청은 조직원이 청년조직이라는 특성상 당의 전투적 전위대로서 활약하였다. 당시 학교 내에도 민청, 민애청이 있었고 조천중학원의 경우 학생들 70-80%는 직접 도당의 지시를 받을 만큼 당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⁷¹⁾ 학생들은 빼라와 벽보 붙이기 등 선전 활동에 동원되었고 민청, 민애청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는 4·3발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당시 조직표를 보면 1947년 3·1대회 이후에 학생부가 신설되어 선전부, 조직부와 동등한 위치에 놓일 정도로 학생들의 활동은 당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졌다.⁷²⁾

민청과 더불어 면·리에 이르기까지 광대하게 조직된 부녀동맹도 1947년 1월 15일에 결성된다. 위원장에는 김이환, 부위원장에는 고인선, 강어영이 선임되었고, 고덕순을 비롯한 80여명이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⁷³⁾

제주도 부녀동맹 결성은 전국에서 가장 늦게 이루어졌는데⁷⁴⁾ 부녀동맹이

71) 1학년에 입학하면 세포에 가입하게 되는데 일정 정도의 학습기간이 끝나면 교대로 두 사람씩 보증을 서 입당하였다. 학교 내에 세포위원장, 조직부장, 선전부장이 있었고, 도당의 명령을 직접 받았다(제주 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I, 한울, 1989, 52쪽)

72) 강용삼·이경수, 『대하실록 제주 백년』, 태광문화사, 1984, 549쪽.

제주읍 특별위원회: 위원장-김웅식, 조직부장-강대석, 선전부장-이창조, 학생부장-양두선
제주읍 특별위원회는 당조직을 의미한다. 곧 남로당 제주읍위원회를 말한다

73) 「제주신보」, 1947. 1. 28.

74) 조선부녀총동맹은 1945년 12월 22일 결성되었다.(김남식. 앞의 책 97쪽)

결성되기 이전에도 부녀동맹이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여성조직(부녀회등)이 제주도 전역의 읍과 면에 조직되어 있었다. 부녀동맹으로의 개편은 보다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여성운동에 매진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였다.⁷⁵⁾

봉건적 가부장 사회에서 고통받고 있던 여성들은 주로 사회주의 운동가들에 의해 설립된 야학을 통해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되었다. ⁷⁶⁾ 특히 여성들은 일부일처제의 확립으로 봉건적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남성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등 좌익이 제시한 여성해방의 전망 때문에 남로당의 지지기반이 되었고, 열성적으로 활동하였다.

1948년 제주도의 정치적 상황이 한층 긴장을 더해 가는 가운데 남로당 제주도당 조직은 몇 차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 첫 번째는 조직부 연락책의 전향으로 빚어진 “1·22검거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2·7구국투쟁 이후 전 도에 불어닥친 ‘2·7검거선풍’이었다. 1월 22일 미군정은 남로당 제주도당 지도부가 회합을 갖고 있던 조천면 지부를 습격, 106명을 체포하고 등사기를 비롯하여 다량의 문서를 압수했다.

미군정은 이때 압수된 문서에는 “2월 중순에서 3월 5일 사이에 봉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폭동지령 유인물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 도에 걸쳐 검거령을 내리고 1월 26일까지 115명을 추가로 구속하였다.⁷⁷⁾ 이 무렵 김달삼, 안세훈, 김요관 등 남로당 거물급 지도자들이 체포되었지만 김달삼은 경찰서로 호송되는 도중 도망쳤다.⁷⁸⁾

75) 이승희, 「한국여성운동사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0, 158쪽

76) 제주도의 야학운동은 1920년대부터 사회주의 운동가들에 의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일례로 신좌면 조천리 야학은 제주도 야채이카사건에 연루되었던 김유환이 강사를 맡았었다.) 일제하 사회주의 운동가들과 여성운동의 관계는 해녀투쟁에서 잘 나타난다.^{8.15} 이후에도 자주교육운동의 일환으로 부녀야학이 이루어졌다.

77) G-2 P.R 1948. 2. 6. 그러나 좌익 측 자료에서는 이에 대해 남로당 세력을 압살하기 위해 꾸며낸 유언비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봉현·김민주, 앞의 책, 70쪽)

곧이어 전국적으로 전개된 2·7구국투쟁의 여파로 인해 제주도에서도 2월 7일 당일에는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2월 8일 성산면 신양리의 시위를 시작으로 3일에 걸쳐 방화 1건, 17차례의 시위가 발생하고 6개의 경찰서가 습격당하고 각종 빼라가 살포되었다.⁷⁹⁾ 이에 경찰은 290명을 체포하고, 2월 12일에는 CIC까지 가담하여 남로당 제주도당본부를 습격, 다량의 문서와 빼라를 압수하였다.⁸⁰⁾

그러나 남로당 제주도당 조직을 노출시킨 1·22검거사건도 앞의 8·15폭동음모사건처럼 요란한 검거선풍을 일으켜놓고도 사후처리는 흐지부지되었다. 그것은 폭동음모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못한데다, 3월에 이르자 5·10사건을 앞두고 미군정에서 특사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제주도당 거물급 인사들도 4·3발발 이전에 모두 석방되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으로 조직의 노출이란 치명타를 입은 제주도당은 만약 단독정부가 수립된다면 당이 존립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당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무장투쟁을 사고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남로당 제주도당은 단선이 구체화되자 무장투쟁을 준비해 나갔다. 남로당 지도부가 무장투쟁을 결행하기까지 어떤 논의와 준비 단계를 거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증언을 종합해볼 때 대체로 2월회의에서 무장투쟁노선을 채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2월회의는 1948년 2월중에 약 보름동안 구좌면과 조천면 지역을 오가면서 이루어졌던 중요 간부회의이다. 각 지역책임자들이 필수적으로 참석하였고 최종회의는 신촌에서 연 3일 동안 열렸다. 정세판단과 대응책에 대한 열띤 논쟁

78) 김달삼의 도주가 경찰관 프락치에 의해 저질러졌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제주도 경찰국, 『濟州警察史』, 1990, 297쪽).

79) 「濟州新報」, 1948. 2. 20.

80) G-2. P.R. 1948년 3월 12일

이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이 ‘무장투쟁’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 무장투쟁을 지지하는 소위 강경파와 이를 반대한 온건파의 노선갈등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무장투쟁의 반대에 있던 소위 온건파는 안세훈, 조몽구, 김유환, 김용해 등의 40대 지도부들이고, 김용관, 김달삼⁸¹⁾ 강규찬, 김양근, 김대진 등 8·15이후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신진급진파들은 무장투쟁을 지지하였다는 것이다.⁸²⁾ 그리고 강.온건파의 노선갈등으로 4·3발발 직전에 도당 지도부 핵심세력이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을 했던 장년 층에서 보다 젊고 급진적인 인물들로 교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월회의에서 “안세훈, 조몽구, 김유환 등은 무장투쟁을 반대하지도 않았고 당시에 무장투쟁을 반대하는 의견이 정식으로 제기되지도 않았다”는 증언도 있다.⁸³⁾ 2월회의가 이루어질쯤에는 이미 제주도당은 일정정도 지도부

81) 김달삼의 본명은 이승진으로 대정면 하모리에서 태어났는데 4.3당시 25,26세 정도였다. 경도 성봉중학, 중앙대학 전문부에 진학했으나 중퇴하고 해방후 대구시 노동운동에 투신하여 10월 항쟁에 참가하였다. 1946년 말 제주도로 돌아와 남로당 대정면당 조직책을 지냈다. 3.1사건 이후 도당 조직책이었다가 1948년 도당 군사부책을 맡았다. 4.3발발 후 인민유격대장으로 4.3무장투쟁을 주도하였으나 8월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해주로 떠나서 최고인민회의 대위원 및 김일성, 허헌 등과 함께 49명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위원으로 선출된다. 1948년 8월 인민유격대 태백산지구(제3병단)사령관이 되어 남하 1950년 3월까지 유격활동을 지휘하였다. 1950년 4월 28일 삼척 전투에서 전사하였다고 하는데, 사망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한국전쟁사』 『공비연혁』 『혈의역사』 등 대부분의 기록에서는 4월 28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82) 제주 4·3연구소, 앞의 책, 162-163쪽. 뿐만 아니라 4·3을 주제로 한 논문의 대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담고 있는 글은 다음과 같다. 박명립, 앞의 글, 76쪽; 고창훈, 「4·3민중항쟁의 전개와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 4, 한길사, 1989, 270쪽; 김창후, 앞의 글, 134쪽;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587쪽.

83) 조벽파 증언. 조벽파는 조공 제주도당이 결성된 직후부터 조천면 당책을 맡았다. 1946년 말 제주를 떠나 일본과 부산을 왕래하며 활동했으며 1948년 8월 해주 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제주도 조직을 재건하라는 지시를 받고 안세훈과 함께 남하하였으나 제주도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주에서 활동하였다. 1953년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 도피 도중 광주 외곽 동국에서 안세훈이 사망했을 때 같이 있었다. 조벽파가 2월회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2월회의에 직접 참여했던 안세훈의 이

개편이 이루어져 신진세력들이 도당의 핵심세력으로 자리잡고 있었고, 당시의 급박한 정세 때문에 무장투쟁을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즉 미군정과 우익의 탄압으로 당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고 단선이 구체화되는 상황 속에서 무장투쟁 이외의 대안을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진세력들이 무장투쟁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장년층도 심적으로는 무장투쟁을 반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⁸⁴⁾

“무장투쟁을 주장한 신진세력은 정세를 낙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단선을 저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제주도 봉기는 일종의 기폭제가 되어 전국적인 봉기를 유발시켜 제주도에 진압병력을 추가로 내려보내지 못할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남로당 세포가 많이 들어가 있던 국방경비대는 중립을 지킬 것이고 그러면 경찰력만으로는 진압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미국 또한 국제문제로 화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진압에 관여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⁸⁵⁾

그러나 1948년 4월의 이 시점은 남로당이 아직 본격적인 무장투쟁으로 돌입한 단계가 아니었으므로, 4·3봉기는 38선 이남 지역만의 단독선거를 저지

야기를 중심으로 증언했기 때문에 이 주장은 유용하다고 여겨진다. 그 동안 알려진 2월회의 내용(제주4·3연구소, 앞의 책, 162-163쪽) 역시 2월회의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이 증언한 것이 아니었고, 그 주장에는 틀린 사실이 좀 엿보인다. 예를 들면 김정로가 2월 회의를 반대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김정로는 이미 1947년 2월말 하귀회의에서 제명을 당해 당을 떠났다.

84) 일제시대부터 사회주의운동에 참여했던 소위 장년층들이 무장투쟁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무장투쟁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김용해’의 경우를 보더라도 2월회의가 끝난 직후 제주도를 떠나 당적을 목포로 옮겨 활동하였고, 당을 떠나거나 일본으로 도피한 사람들도 있다.

85) 이운방의 증언에 따르면 4.3발발 직후 아지트에서 김달삼과 만났을 때 김달삼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려던 남로당의 운동이 발전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긴 하지만 남로당 중앙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제주도당의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듯하다.⁸⁶⁾ 이 시기 남로당 중앙은 38선 이남 전지구당은 선거반대투쟁을 보다 신중하게 전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곧이어 북측에서는 38선 이남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평양연석회의에 참가해 달라고 초청하였고, 그러한 일련의 상황 전개로 보아 선거반대투쟁을 더욱 더 중앙의 통제 아래에서 신중하게 수행하려 하였을 것이다.⁸⁷⁾

다음과 같은 증언을 통해서도 4·3항쟁은 제주도당의 독자적인 결정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항쟁지도부는 국방경비대 9연대도 항쟁에 참여시키려고 노력했으나 9연대 책임자가 “나는 중앙당의 지시를 받고 여기 책임자로 온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중앙당의 지시를 받아야지(제주)도당의 지시는 받을 수 없다. 그것도 몇 사람이면 모른다. 전 군인들은 봉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⁸⁸⁾ 당시 남로당 국방경비대 프락치 공작은 장교와 사병을 구분하여 일반 사병은 각 지역 도당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었지만 장교는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있었다.⁸⁹⁾ 따라서 남로당 9연대 세포책 직책이

86) 남로당의 무장투쟁전술은 1948년 2월에 전개된 2.7구국투쟁과 5.10단선반대투쟁을 계기로 전개된 부분적인 무장투쟁에서 그 시발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무장부대인 야산대는 당활동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용되었다. 남로당이 본격적인 무장투쟁전술로 전환한 시기는 1948년 여순항쟁 이후부터이다(김남식, 「1948-50년 남한 내 빨치산 활동의 양상과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 4, 한길사, 1989, 210-211쪽)

87) 존 메릴, 『침략인가 해방전쟁인가』, 과학과 사상, 1988, 126쪽.

88) 제민일보 4·3 취재반, 「항쟁참여자의 증언-내가 겪은 4·3」, 『4·3장정』 6, 70쪽.

89) 남로당의 국방경비대 공작은 장교와 사병을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장교의 경우에는 사관학교에 침투시키거나 이미 임관된 장교를 포섭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사병의 경우에는 당성이 강하고 성분이 좋은 사람들과 이미 신분이 노출된 사람을 리.면.군.당.위.원.회.를 거쳐 도당위원회에 보내면 도당위원회에서 각 부대에 이미 조직된 조직망을 통하여 침투시켰고, 이 경우 연대 인사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였다. 방법에서의 구분과 더불어 관장하는 부서도 달랐다. 장교의 선발과 교육 및 배치 등 모든 인사권이 중앙집권적인 일원화를 이루고 있었고, 근무지 이동이 심했으며, 포섭된 장교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하여 남로당 중앙당에서 직접 장교 공작을 관장하였다. 반면에 도에 주둔하고

장교임을 고려할 때 중앙의 지시를 못받았다는 것은 제주도당이 당 중앙과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무장투쟁을 일으켰음을 의미한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무장투쟁을 결정한 2월회의에서 4·3의 발발까지에는 한달 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남로당과 연계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를 추진시켰고, 봉기가 일어난 후에야 사후 추인의 형식으로 중앙의 승인을 받았다⁹⁰⁾

그러나 당시 남로당 중앙이 하부조직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도당 차원의 독자적인 봉기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었다. 섬이라는 공간의 특수성 속에서는 육지의 투쟁이 함께 일어나야만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욱더 중앙과의 협의를 거쳐야 했고 육지부의 투쟁역량을 고려했어야 했다.

제주도의 무장투쟁은 당의 주체적 조직역량과 계속 지배력을 높여 가는 미군정·우익의 물리력을 비교해 볼 때 무리한 것이었다. 그러나 5·10단선을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는 인식과 미군정·우익의 탄압으로부터 당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 속에서 당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자위적인 측면이 맞물리면서 남로당 제주도당은 무장투쟁을 결정하였다. 즉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장투쟁 이외의 대안이 없다는 것이었다.

제주도당의 이러한 결정은 미군정·경찰·서북 청년단의 탄압에 투쟁하려는 일반 제주도민의 상황과 결합하면서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미 제주도는 역사적 항쟁을 통해서 조직, 무장투쟁, 민중해방운동의 경험을 지

있던 각 연대는 자체가 모병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동도 적었기 때문에 각 도당위원회에서 직접 사병 공작을 지도하고 있었다.(김남식, 앞의 책, 379-380) 이러한 이유로 위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90) 4·3항쟁에 대해 남로당 중앙이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5월 25일 당 기관지 『노력인민』 보도부터이다. 그러나 4월 중순이 되면서 최소한 전남도당과는 연계가 이루어진 것 같다. 당시 순천군당에서 일했던 조직원이 전남도당의 지시문을 갖고 제주도로 가서 김달삼에게 전달했다고 한다(심명섭 '4·3당시 순천군당 지도과장'증언)

니고 있었다. 따라서 4·3항쟁의 전개는 제주민의 미군정·경찰·서북 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제주민의 투쟁적 측면이 제주도당의 독자적인 구당 이해관계에 따른 단선저지측면과 결합해 통일정부수립론이라는 정치적 측면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2) 4·3 무장 봉기와 단선반대 민중운동(1945.4.3-8월말)

제주 4·3항쟁은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한라산과 주위의 각 오름들에서 일제히 봉화가 오르면서 시작되었다. 1500여명(무장 500명, 비무장 1000명)의 인민자위대는 도내 24개 지서 가운데서 제1구 경찰서 관내 화북, 삼양, 조천, 세황, 외도, 신엄, 애월, 한림지서와 제2구 경찰서 관내 남원, 성산포, 대정지서 등 11개 지서와 서북청년단숙사, 국민회, 독촉 대동청년단 사무소 등을 습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시작된 제주 4·3항쟁은 57년 4월 2일 마지막 빨치산인 오원권이 생포될 때까지 만 9년에 걸쳐 전개되었다. 그러나 사실상의 전투와 항쟁 그리고 살육은 1948년과 49년에 집중되었다.

4·3항쟁은 크게 보아 세시기로 진행되었다. 첫째 선거가 시작되기 전까지인 1948.4·3-8월말의 시기로, 민중과 남로당이 결합하여 반미와 단선저지, 민족자주의 염원을 표방하고 5.10단선을 파탄시켜 남한단독정부수립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둘째 시기는 1948.9월-1949.5월 15일로, 비록 제주도에서는 선거를 파탄, 저지시켰지만 중앙에서는 선거가 치뤄지고 단독정부 수립이 기정 사실화된 시기이다. 4·3발발 이후 5.10단선까지는 '무장투쟁'이라고는 하지만 좀 더 조직적이었다는 점을 빼놓고는 공격횟수나 규모면에서나 당시 전국적인 단선거부투

쟁의 면모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⁹¹⁾ 그러나 5.10단선이 끝나고 미군정과 군경토벌대에 의한 강경 진압 작전이 실시됨에 따라 인민유격대는 자위적이고 방어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남한 단독정부수립이 확실시됨에 따라 제주민중은 남로당을 매개로 하여 더 이상 자주독립국가가 아닌 통일정부수립으로 투쟁의 방향을 전환한다. 그리고 이 통일정부론의 내용은 북에서 세워지는 인민공화국에 대한 정통성을 확보하는 투쟁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능동적인 선택이라기 보다는 남로당 측이 남한에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그들과의 타협여지가 봉쇄되어 정면으로 무장투쟁을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진다.⁹²⁾

셋째 시기는 1949.5.15-1953.6월말로 남북한에 단독정부가 수립된 이후의 기간으로, 남한단독정부의 초토화작전으로 인하여 항쟁 세력이 약화되어 49년 봄의 대토벌을 거쳐 49년 중반에 이르면 무장투쟁은 사실상 끝나게 된다.

제 1시기의 항쟁의 목적은 4월 3일 인민자위대가 기습공격과 더불어 살포한 두 가지 호소문 -하나는 무장대가 공격대상으로 삼았던 경찰관·공무원·대청단원들에게 보내는 경고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도민에게 보내는 호소문-과 전단에 잘 나타나 있다.⁹³⁾

친애하는 경찰관들이여!

탄압이면 항쟁이다. 제주도 유격대는 인민들을 수호하며 동시에 인민과 같이 서고 있다.

91) HQ, USAFIK G-2 Weekly Summary. 1948년 4월 23일에 따르면 같은 기간 중 선거관계 기관이 받은 공격은 전국적으로 52회로서 경북21회, 충북 10회, 서울 10회, 전남 8회, 제주도 2회로 나와 있다. 제주도의 경우는 실제보다 적게 기록되었지만 다른 지방의 단선저지투쟁 또한 제주도에 비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92) 朴明林 「濟州道 4·3 民衆抗爭에 關한 研究」, 고대 정외과 석사학위 논문, 1988, 138쪽.

93) 호소문은 金奉鉉·金民柱 공편, 「제주도 인민들의 4·3 무장투쟁사: 자료집」, 大阪: 文友社, 1963, 84쪽

양심 있는 경찰원들이여! 항쟁을 원치 않건 인민의 편에 서라.
 양심적인 공무원들이여! 하루 빨리 선을 타서 부여된 임무를 소여하고, 직장을 지키며, 악질동료들과 끝까지 싸우라.
 양심적인 경찰원.대청원들이여! 당신들은 누구를 위하여 싸우는가.
 조선사람이라면 우리강토를 짓밟는 외적들을 물리쳐야 한다.
 나라와 인민을 팔아먹고 애국자들을 학살하는 매국매족노를 꺼꾸러 뜨려야 한다.
 경찰원들이여! 총부리란 놈들에게 돌려라. 당신들의 부모.형제들에게 총부리란 돌리지 말라.
 양심적인 경찰원, 청년, 민주인사들이여! 어서 빨리 인민의 편에 서라. 반미구국투쟁에 호응 꺾기하라!

시민 동포들에게!
 경애하는 부모 형제들이여!
 4·3 오늘은 당신 님의 아들.딸.동생은 무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매국 단선 단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과 완전한 민족해방을 위하여!
 당신들의 고난과 불행을 강요하는 미제식인종과 주구들의 학살만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오늘 당신님들의 뼈에 사무친 원한을 풀기 위하여!
 우리들은 무기를 들고 꺾기하였습니다.
 당신님들은 중국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우리들을 보위하고 우리와 함께 조국과 인민이 부르는 길에 꺾기하여야 하겠습니까.⁹⁴⁾

미군은 즉시 철퇴하라! 망국적 단독선거를 절대 반대한다! 투옥중인 애국자를 무조건 즉각 석방하라! 유엔위원단은 빨리 돌아가라! 이승만 매국도당을 타도하라! 응원 경찰대와 테러집단을 즉시 철수하라! 조선통일독립만세!⁹⁵⁾

이 호소문은 세 가지로 그 내용이 압축된다. 첫째, 시대 인식에 의한, 미국의 전후 점령정책에 반대하는 동시에 반제민족해방운동으로서의 4·3봉기, 둘째, 제주남로당의 정치적 성격으로서의,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통일운동으로서의 4·3봉기, 셋째, 미군정·경찰·청년단의 탄압에 저항하는 민중항쟁으로서의 4·3봉기의 성격을 함축하고 있다.

즉 1시기는 제주 민중의 미군정·경찰 청년단의 탄압에 저항하는 보복적 측면의 성격과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정치적 성격의 융합을 가지고 있다.

94) 金奉鉉·金民柱 공편, 『제주도 인민들의 4·3 무장투쟁사: 자료집』, 大阪: 文友社, 1963, 84-85쪽.

95) 김석범, 앞의 책, 제4권, 213쪽.

제1시기 제주도민의 미군정·경찰·서북 청년단의 탄압에의 투쟁 측면은 무장대의 주요 공격대상이 경찰지서, 서북청년단을 비롯한 청년단체, 적극적으로 반공활동을 하며 빨갱이 소탕을 하던 인물 또는 숙소였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4월 6일 이호리와 봉개리 2명⁹⁶⁾, 4월 9일 신암리 3명⁹⁷⁾ 등 초기에 무장대에 의해 살해된 인물들은 모두 경찰, 청년단원이었다.

또 이공격의 폭력성과 유혈의 정도는 미군점령기 다른 지방에서 빈발하던 민중항쟁, 예컨대 10월 인민항쟁이나 2·7 구국투쟁, 또는 미곡수집반대투쟁의 수준을 크게 넘지는 않았다. 이것은 봉기민중들이 과격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특히 무장대의 무장력은 전면적 무장봉기, 또는 그에 준하는 투쟁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저차적이었다. 소량의 카빈소총, 일제 99식소총이 가장 중요한 무기였고 기타 창·농기구 등의 일시적인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또한 한라산에서 내려온 민중무장대의 구성을 보면 이들 중 무장한 인물은 전체의 1/3(1500명중 500여명)에 불과했으며 그것도 대부분은 농기구 등 원시적인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나머지 1000여명은 비무장이었는데다가 이들중 일부는 여성이거나 어린이 또는 노인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전면적인 무장봉기를 수행할 고등의 군사적 훈련을 받은 전투원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비전투적이었고 민간인적이었다.

제주도당의 단선저지가 곧 통일정부수립이라는 정치적인 측면은 4·3이 일어난 첫주에는 경찰관서, 우익청년단원을 겨냥했지만 4월말에는 5·10선거에 관여하는 선거관리위원들로 그 공격대상을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나타난다.⁹⁸⁾ 적극적인 선거반대투쟁으로 투쟁 지도부는 선거활동에 관여하는 선거위원회

96)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8. 4. 8.

HQ, 6th Inf Div, G-2 Periodic Report, 1948. 4. 6.

97) HQ, 6th Inf Div, G-2 Periodic Report, 1948. 4. 10.

98)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2권, 전예원, 1994, 266쪽.

인물들과 공무원 그리고 입후보자에 대한 테러를 강행함과 동시에 제주도민들로 하여금 유권자 등록 자체를 거부하도록 하는 선거투쟁도 강행하였다. 특히 5·10선거는 누구를 지지하여 당선시킬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단선찬성과 단선반대라는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참가냐 거부냐는 중요한 문제였다.

5·10선거일이 임박해 오자 봉기지도부인 남로당 제주도당은 4월 15일 당대회를 개최하고 무장조직을 정예화하여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5·10선거를 기필코 파탄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도당부는 종래의 '인민자위대'를 해체하고 각 면에서 '열렬한 혁명정신과 전투경험의 소유자' 30명씩을 선발하여 인민유격대를 조직하였다.⁹⁹⁾

이들의 초기공격은 도내의 행정과 치안이 마비될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4월 9일 마감된 선거인 등록 또한 전국적으로는 91.7%의 등록을 보인 반면 제주도는 64.9%로 등록율이 가장 낮았다.¹⁰⁰⁾ 경찰과 우익청년단의 협박과 폭력에 의한 강요된 선거 등록자가 많았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결과는 유격대의 공격이 성공적이었고 단선저지라는 투쟁의 목적을 일반 대중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미군정은 4월 3일 자위대의 공격이 시작되자 4월 5일에 '제주도 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주민들에게는 통행증제를 실시하여 통행을 제한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또한 각 도로부터 차출한 1700명의 경찰을 증파하여 3·1시위 이후 강화되어 있던 경찰력을 더 늘리고, 4월 10일에는 부산에 주둔해 있던 제5연대 제 2대대(대대장 오일균)을 파견했다. 미군정은 이에 더하여 도민에게는 공포의 대상인 서북청년단을 급증시켰는데 항쟁기간동안 서북청년단은 800-1200명에 달하였다.¹⁰¹⁾

99) 김봉현·김민주, 앞의 책, 88쪽.

100) 「東亞日報」, 1948. 4. 14, 「朝鮮日報」, 1948. 4. 14.

미군정은 항쟁의 원인과 배경은 무시한 채 경찰력과 우익청년단 증강을 통해 물리력으로 진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4월 27일에는 당시 모슬포에 주둔해 있던 국방경비대 9연대를 작전에 투입시키기로 결정하였다.¹⁰²⁾

국방경비대 9연대는 항쟁 초기부터 “모든 원인은 경찰과 서북 청년단에 있다”면서 일체 진압에 개입하지 않고 있었고 항쟁지도부 또한 경비대는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전망을 할 정도로 경비대에 호의적이었다. 당시 9연대장이었던 김익렬 중령은 그의 유고 『4·3의 진실』에서 경찰의 토벌작전이 별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던 4월말경 도군정장관 맨스필드 중령의 권유로 유격대측과 회담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소위 ‘4·28 평화회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인민유격대장 김달삼과 국방경비대 9연대장 김익렬중령과의 회담이다. 4·28회담은 김익렬이 무력진압에 앞서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군정장관 맨스필드와 협의 하에 유격대에게 협상을 제시, 유격대측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한다.¹⁰³⁾

4.28회담은 48년 4월 28일 대정면 구억리 구억국민학교에서 김달삼과 김익렬 그리고 9연대 정보주임인 이윤락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익렬의 유고에 의하면 이 회담에서 김익렬은 ①전투행위 즉각 중지 ②무장해제 ③범법자 명단제출과 즉각 자수의 3개항을 요구했고 김달삼은 ① 제주도민으로 하여금 행정과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반역적인 악질경찰과 서북 청년단 추방 ② 제주도민의 경찰이 형성될 때까지 군대가 치안을 맡고 지금의 경찰해제 ③의거 참여자를 전원 불문에 붙이고 안전과 자유보장 등 3개항을 요구했다. 김익렬의 요구①②항에 양측은 “72시간에 안에 전투를 완전 중지하되 산발적인 충돌이 있으면 연락미달로 간주하고 5일 이후의 전투는 약속위반의 배신행위로 본다.

101) 김창후, 「1948년 4·3항쟁, 봉기와 학살의 전모」, 『역사비평』, 1993. 봄호, 142쪽.

102) HQ, USAFIK G-2 Weekly Summary. 1948. 4. 30, 「朝鮮日報」1948. 5.3, 「서울신문」, 1948. 5. 3.

103) 「김익렬 9연대장 실록유고」 10-12회, 「제주신문」, 1989. 8. 30, 1989. 9. 1.

무장해제는 단계적으로 하되 약속을 위반하면 즉각 전투를 재개한다”고 합의했고 김달삼의 ①②항에 대해서도 회답이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경비대가 치안을 맡게 되며 경찰을 단축 개편하겠다는 선에서 합의를 하였다. 문제는 ③항이었으나 봉기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선에서 합의를 함으로써 회답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것이다¹⁰⁴⁾

그러나 김익렬의 이러한 주장은 인민유격대가 무장투쟁을 일으킨 목적에 비추어 볼 때 4·3항쟁을 항쟁이 아닌 4·3해프닝 정도로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 4·3항쟁의 목적은 4월 3일 봉기시 인민유격대의 호소문과 슬로건에 잘 나타나 있는데 첫째는 5·10단선을 저지하여 통일독립국가를 이룩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찰과 서북 청년단의 탄압에 맞서 일어난 자기생존을 위한 자위투쟁이라고 유격대 측은 밝히고 있다.¹⁰⁵⁾

따라서 항쟁을 일으킨 주요한 목적은 미소양군철수와 유엔조선임시위원단 철수를 통해 5·10단선을 저지하고 통일독립국가를 이룩하는 것이다. 그런데 5·10단선을 불과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그리고 단선저지의 목적을 달성한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격대 측이 무장해제에 동의했다는 주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¹⁰⁶⁾ 심지어 김익렬의 유고에는 김달삼이 단선저지의 요구를 했다는 말조차도 들어가 있지 않다.¹⁰⁷⁾ 그리고 4월 28일이라는 시

104) 「김익렬 9연대장 실록유고」 14-16회, 「제주신문」, 1989. 9. 5, 9. 6, 9. 7.

105) 김봉현·김민주, 앞의 책, 84-87쪽 참조.

106) 김익렬의 유고에 따르면 김달삼의 첫째 요구에 대해 “나는 친일파와 민족반역자, 관리, 경찰은 사실이 증명되면 해직 추방할 것이며 서청도 범법자는 처벌 추방하겠지만, 제주도민만으로 행정기구, 경찰을 편성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나의 권한 밖이다. 그러나 독립되고 우리 정부가 들어서면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선에서 합의 결정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김익렬 유고」 15회, 제주신문 1989년 9월 6일) 그러나 이 주장은 4.3항쟁의 목적을 완전히 변질시키는 것으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김익렬이 주장하는 정부는 남한단독정부를 의미한다. 그런데도 단선을 저지하고 통일독립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무장투쟁을 일으킨 유격대가 이것을 수락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이다.

107) 그러나 9연대 정보주임의 직책으로 김익렬과 함께 회답에 참석했던 이윤락은 “김달삼은 분명히 정치적 성격인 미군철수문제를 거론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익

점은 유격대의 전력이 약화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동안의 전투과정에서 무기를 확보하는 등 전력이 주장되고 있었던 상황으로 산간지역은 유격대의 통제하에 있을 정도로 공세를 취하고 있을 때였다. 또한 아무리 김익렬이 맨스필드 제주도군정장관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고 회담을 제의했다고는 하지만 5·10단선저지, 미소양군철수, 유엔조선임시위원단 철거는 미국의 대한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것으로 일개 도군정장관의 권한 밖이라는 것을 유격대 측이 몰랐을 리 만무하다. 사실 4월 28일 회담이 있던 직후인 5월 6일 김익렬은 해임되었고 박진경이 부임하면서 이후 초토화 작전이 실행되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유격대가 회담에 응했던 이유는 그들이 항쟁 초기부터 경비대의 중립을 주장해왔고, 경비대와의 직접교전을 피하고 싶어했기 때문인 것 같다. 즉 당시 경비대쪽에서 회담을 제안했는데 일방적으로 거부하면 당장 교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김달삼은 전술적인 차원에서 회담에 응했고 통하지도 않는 요구조건의 관철을 놓고 연성을 높이기보다는 경비대의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회담을 끝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익렬의 유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5·10단선을 저지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던 항쟁세력과 이를 지지했던 제주도민의 통일독립국가수립 의지를 변질시킬 수 있다.

선거를 관철시키려는 이와 같은 미군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선거를 실시할 수 없었다. 5월 7일에서 10일에 집중된 투쟁양상을 보면 5월 8일부터는 각면의 공공기관에 대한 습격과 봉화시위를 대대적으로 전개했고 5월 9일에는 조천면,중문,함덕,대정 등지에서 선거인 명부를 탈취하고 투표함을 배치

렬은 “그 문제는 우리가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으나 생명문제라든가 의식주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165회, 「제민일보」, 1993. 4. 9.)

하지 못하도록 했다. 5월 10일 선거 당일에는 제주읍내 투표장인 읍사무소, 세무소 등이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선거를 거부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산에 올랐다. 그리고 중문면, 조천면 등 각지의 투표소를 기습하여 선거인 명부, 투표함 등을 소각시켰다.¹⁰⁸⁾ 제주도의 65개 지역투표 기능이 정지되었고, 북제주군 조천면의 경우에는 14개 투표소가 모두 파괴되었고 선거관계공무원들의 50%가 사표를 제출했다.¹⁰⁹⁾

이와 같은 상황에서 치러진 제주도 5·10단선은 투표자가 45,822명으로 투표율은 선거등록자의 52%, 전유권자의 35에 불과했다.¹¹⁰⁾ 투표율이 이렇게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선거결과는 투표율 70%에다 북제주 갑구에 梁貴珍, 을구에 梁秉直 등이 당선자로 발표되었다.¹¹¹⁾ 그러나 결국 과반수에도 못 미치는 북제주군의 선거결과에 대해 제주도 선거위원과 국회선거위원회에 서는 선거의 무효화를 건의했고, 이에 대해 단군정장관은 5월 24일자로 북제주군의 2개 선거구 무효화를 선언하였다.¹¹²⁾ 그러나 재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강력한 토벌작전에도 불구하고 6월 23일 연기된 선거는 유격대의 강력한 토벌작전에도 불구하고 6월 23일로 연기된 선거는 유격대의 강력한 무장투쟁과 도민들의 거부투쟁으로 끝내 치러지지 못했다.¹¹³⁾ 이로써 제주도는 5·10단선을 저지한 유일한 지역이 되었다.

제주도에서 5·10단선이 실패로 끝나자 5월 15일 미군정은 보다 강력한 진압작전을 전개하기 위하여 제2연대, 제3연대, 제3연대, 제4연대의 기간요원을 차출하여 5월 4일 수원에서 창설한 제11연대를 제주도로 이동시켰다. 제11연

108) 김봉현·김민주, 앞의 책, 87쪽

109) HQ, USAFIK G-2 P.R, 1948. 5. 11.

110) 「서울신문」, 1948. 5. 12.

111) 「東亞日報」, 1948. 5. 16, 「朝鮮日報」, 1948. 5. 16.

112) 「東亞日報」, 1948. 5. 24, 「朝鮮日報」, 1948. 5. 24.

113) 단군정장관은 6월 10일 행정명령 제22호로써 제주도 재선거를 무기한 연기시켰다. (「군정청관보」, 1948. 6. 10.)

대는 기존의 제9연대 1개 대대 및 제5연대 1개 대대를 흡수·통합하여 연대를 재편성했다. 제11연대 연대장은 김익렬의 뒤를 이어 제9연대장을 맡고 있었던 박진경이 임명되었다.¹¹⁴⁾ 경비대외에 경찰도 계속 확충되었다. 조병옥은 담화를 발표, 강력한 토벌을 분명히 했고, 경찰특수부대를 파견하는 한편 서북 청년단단원을 중심으로 증파하였다.¹¹⁵⁾

5월 중순경에는 미20연대장 브라운 대령을 제주지역 미군사령관으로 파견, 모든 현지의 진압작전을 지휘하도록 하였다. 브라운 대령은 '사건의 원인에는 흥미 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이다'라면서 강경방침을 확고히 하였다.¹¹⁶⁾

단선이 파탄되면서 진압작전의 주도권은 경찰에서 경비대로 넘어갔다. 5월 12일부터 경비대는 유격대를 찾아 각 마을과 산악을 공격하기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이 폭도, 폭도 가족, 빨갱이 내통자 등의 이름으로 체포되었다. 5월에서 6월초에 걸쳐 경비대는 한라산을 서에서 동으로 일소하는 작전¹¹⁷⁾을 전개하는 등 박진경의 강력한 토벌작전은 일단 성공을 거두었다. 유격대의 공세가 완화되었으며, 토벌을 피해 더 깊은 산 속으로 이동하였다. 5월 27일까지의 포로 숫자는 3126명¹¹⁸⁾으로 이들의 대부분은 민간인이었다.

그러나 박진경의 무차별 토벌작전은 유격대와 일반 도민들로 하여금 그 동안의 국방경비대에 의한 호의적인 인식을 적대적으로 변화시켰고, 남로당세포가 많았던 경비 내에는 대원들이 무기와 장비를 갖고 입산하는 등 반발이 심했다. 결국 6월 18일 박진경은 남로당 세포인 문상길중위 등에 의해 암살 당했다.¹¹⁹⁾

6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소강상태가 지속되었다. 그 이유는 남북한에

11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해방과 건군』, 1967, 440쪽.

115) 「朝鮮日報」, 1948. 5. 18.

116) 조덕송, 「유혈의 제주도」, 「신천지」, 1948. 7월호.

117) HQ, USAFIK G-2. Weekly Summary. 1948. 6. 4.

118) 「東亞日報」, 1948. 6. 5.

11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해방과 건군』, 1967, 441쪽.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미군정과 이승만은 반대세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알림으로써 대한민국정부 출범의 정당성을 부여하려 하였다. 유격대 또한 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한 '8.25지하선거'에 총역량을 집중해야 했다. 제주도당은 3개 선거구에서 선거를 실시했다. 유격대와 마을 자위대는 민주부락을 비롯한 여러 마을 찾아다니며 연판장운동을 전개하였다. 8월 초순 김달삼, 강규찬, 안세훈, 고지희, 문등용, 이정숙 등 6명이 제주도 대의원으로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해주로 떠났다.¹²⁰⁾ 제주도 봉기세력이 인민공화국 수립에 차가한 것은 남한에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그들과는 타협여지가 봉쇄되어 정면으로 무장투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선택이었다. 이 지하선거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과 지도부가 목표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강제성을 띤 측면도 있기 때문에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육지부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활발한 편이었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유격대와 일반 대중의 유대는 약화되지 않았다.

120) 김봉현·김민주, 앞의 책, 154쪽. 그러나 안세훈은 4.3발발 당시에는 제주도에 없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5명이 출발하고 안세훈은 다른 경로를 통해 월북하게 된다.

5. 제주 4·3항쟁의 성격 변화와 귀결

1) 분단정부 수립후 인민공화국 지지운동으로의 변화 (1948.9월 -1949.5.15)

제2시기에 제주도에서의 5·10단선이 실패로 끝나자 5월 15일 미군정은 보다 강력한 진압작전을 전개하기 위하여 제2연대, 제3연대, 제4연대의 기간요원을 차출하여 5월 4일 수원에서 창설한 제11연대를 제주도로 이동시켰다. 제11연대는 기존의 제9연대 1개 대대 및 제5연대 1개 대대를 흡수·통합하여 연대를 재편성했다. 제11연대 연대장은 김익렬의 뒤를 이어 제9연대장을 맡고 있었던 박진경이 임명되었다.¹²¹⁾ 경비대외에 경찰도 계속 확충되었다. 조병옥은 담화를 발표, 강력한 토벌을 분명히 했고, 경찰특수부대를 파견하는 한편 서북청년단단원을 증파하였다.¹²²⁾

5월 중순경에는 미20연대장 브라운 대령을 제주지역 미군사령관으로 파견, 모든 현지의 진압작전을 지휘하도록 하였다. 브라운 대령은 '사건의 원인에는 흥미 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이다'라면서 강경방침을 확고히 하였다.¹²³⁾

단선이 파탄되면서 진압작전의 주도권은 경찰에서 경비대로 넘어갔다. 5월 12일부터 경비대는 유격대를 찾아 각 마을과 산악을 공격하기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이 폭도, 폭도가족, 빨갱이, 내통자 등의 이름으로 체포되었다. 5월에서 6월초에 걸쳐 경비대는 한라산을 서에서 동으로 일소하는 작전¹²⁴⁾을 전개하는 등 박진경의 강력한 토벌작전은 일단 성공을 거두었다. 유격대의 공세가 완화

12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해방과 건군』, 1967, 440쪽.

122) 『朝鮮日報』, 1948. 5. 18.

123) 조덕송, 「유혈의 제주도」, 『신천지』, 1948. 7월호.

124) HQ, USAFIK G-2. Weekly. Summary, 1948. 6. 4.

되었으며, 토벌을 피해 더 깊은 산속으로 이동하였다. 5월 27일까지의 포로숫자는 3126명¹²⁵⁾에 달했으며 6월 중순에는 6000명에 달했으나¹²⁶⁾ 이들의 대부분은 민간인이었다.

그러나 박진경의 무차별 토벌작전은 유격대와 일반 도민들로 하여금 그 동안의 국방경비대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을 적대적으로 변화시켰고, 남로당세포가 많았던 경비 내에는 대원들이 무기와 장비를 갖고 입산하는 등 반발이 심했다. 결국 6월 18일 박진경은 남로당 세포인 문상길 중위 등에 의해 암살당하였다.¹²⁷⁾

박진경 최경록으로 이어진 대토벌작전으로 산속으로 더 들어가게 되었지만 유격대는 여전히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국방경비대원들의 입산과 무기증강으로 전력이 보충되었고, 유격대는 여전히 마을의 자위대와 여맹 등의 외곽단체를 통한 선전과 배라 활동으로 부락민들과의 연대를 유지하고 있어 식량등 보급활동도 원활히 제공되고 있었다. 경비대의 무차별 토벌은 일반 도민에게 공포심을 심어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유격대에 대한의지를 굳게 하였다. 북제주군의 산간부락은 민주부락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격대의 통제하에 있었다.¹²⁸⁾

이러한 민중의 유격 항쟁에 대한 의지는 중앙 남로당과 연계된 제주 남로당과 결합하게 된다. 중앙 남로당과 제주 남로당과의 연계는 8.25 지하 선거와 해주 남조선 인민대표자 회의 참가에서 엿볼 수 있다.

남한의 단독정부수립에 대응하여 남한의 좌익과 북한이 남북에 걸쳐 실시

125) 「東亞日報」, 1948. 6. 5.

126) 「조선일보」, 1948. 6. 12.

12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해방과 건군」 제1권, 1967, 441쪽.

128) Bruce Cum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2」 Princeton Univ. Press, 1990, 255 쪽.

한 8.25지하선거시 남로당제주도당은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제주도는 특별히 “인민해방군구”로 불렸으며 3개의 선거구로 나뉘어 있었다.¹²⁹⁾

선거는 주로 중산간 부락과 농촌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유격대원들이 밤에 마을에 내려와 “북한선거와 통일정부를 지지하고 남한정부를 반대하는” 서명을 받아가거나 아니면, 백지투표용지에 서명을 받아 가는 형식이었다.¹³⁰⁾ 유격대는 서명을 받아가면서 식량 등의 보급품도 함께 조달해 갔는데 이 과정에서 서명을 거부하거나 북한정권·북한선거에 반대한 자들에 대해 살해·구타·방화를 하기도 했다.¹³¹⁾ 전반적으로 제주도에서의 8·25 지하선거는 강요와 협박 속에 치러진 듯하다.

제주도 좌익세력이 8·25지하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남로당제주도당이 당중앙과의 통제를 받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6월에 남로당 중앙위원회의 메시지가 발표되고, 7월에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답서가 전달되었다. 또한 7월중 남로당중앙당이 근로인민당에 보낸 비밀문서에는 제주도로부터의 보고에 기초하여 미군철수지연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공격을 중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봐 이 시점에 와서 남로당 제주도당은 당중앙과의 연계속에 투쟁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46년 10월 인민항쟁, 47년 3·22 총파업, 48년 4·3봉기의 경우 남로당제주도당은 당중앙의 노선에서 일정하게 독립적으로 행동해 왔으나 이 시점에 와서는 당중앙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¹³²⁾

이와 같이 진압에 대한 민중의 유격 저항의 의지와 당 중앙과 연계된 제주

129)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8. 8. 13.

130)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8. 8. 25.

131)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8. 8. 24.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8. 8. 25.

132) 6월중 남로당이 설정한 11개의 투쟁목표에는 “제주도 인민투쟁을 지원하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8. 6. 18.)

지부 남로당의 상황은 단독선거라는 객관적 조건의 변화에 직면하여 항쟁의 성격을 바꾸게 된다.

두 분단국가가 출현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어느 한쪽 내부의 저항은 단순히 그것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저항이라는 의미보다는 다른 한쪽과 연계되어 자신을 붕괴시키려는 도전으로 인식되었다.

남한의 경우 그것은 그 체제를 출범시킨 미국과 정부에게 모두 적용되었다. 더욱이 두 개의 적대적인 국가의 출현은 그 저항이 아무리 정당한 것일지라도 그러한 저항들은 모두 적대적인 상대방과 연계된 붕괴음모라고 공격할 수 있는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도구까지 갖게 만들어 주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진압세력의 정당성, 또는 옳고 그름을 떠나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자원임에 틀림없었다. 그러한 점에서 2차 미소공위의 결렬이 미군정에게 좌익민족운동세력에 대한 총공세를 억제시켜왔던 마지막 저해요인을 제거시켜준 것이라면, 단선단정과 그를 통한 분단국가수립은 좌익민족운동세력 및 도전세력에 대한 총공세를 정당화시켜줄 가장 유용한 계기를 제공해준 것이었다.

제주도의 경우 항쟁지도부가 대거 북한정권수립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미국과 남한정부로 하여금 이제 앞으로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저항은 북한과 연계된 정부붕괴음모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주도에서의 진압은 미군과 정부군에게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소련·북한과 연계된 공산주의자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어질 수 있었으며, 그러한 명분은 얼마든지 잔인한 방법을 동원하여 진압해도 정당화된다는 논리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중과 제주 남로당은 초기 단선반대=통일 정부 지지에서 이제 남한 반대=북한 지지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능동적 선택이라기 보다는 남한에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그들과는 타협 여지가 봉쇄되어 정

면으로 무장투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또 다른 하나의 선택으로 보여진다.

9월에 뿌려진 삐라의 내용은 분단국가가 수립되었다는 객관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이제 항쟁의 성격이 변전되었음을 알렸다. 한 삐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대회를 지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또 다른 삐라는 “곧 미군이 철수할 것이기 때문에 북조선공화국과 협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다.¹³³⁾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능동적인 선택은 아니었다. 그것은 객관적 조건의 변화가 강제한 다른 한 선택이었다.

분단국가 수립에 이은 토벌대의 증파와 유격대의 공세재개로 인한 9월의 충돌과 유혈은 아마도 더 큰 유혈과 참극을 예고한 전조였는지도 모른다. 10월 1일 수개조의 무장대가 도내 일곱 군데의 경찰지서를 습격, 방화하고 경찰 7명, 청년단원 3명을 살해했다.¹³⁴⁾ 이들 무장대는 모두 경비대복장을 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유격대는 경찰지서 수개를 동시에 공격할 정도의 병력과 무기를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제주읍의 13개구장과 북제주군의 5개면장 등이 사임을 해버려 도내행정이 상당부분 마비되기도 하였다.¹³⁵⁾ 10월초에 유격대는 산발적인 공격과 함께 각종 삐라를 뿌리고 인공기를 배포하는 등 선전공세도 강화해 나갔다.¹³⁶⁾ 10월 8일에는 선미에 인공기를 단 잠수함이 제주도근해에 출현하여 토벌대를 긴장시켰다.¹³⁷⁾

133)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8. 9. 30.

이 삐라들은 이 밖에도 “본토경찰추방, 이승만의 단정분쇄, 세금과 미곡 수집반대, 경찰과 서청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134) HQ, USAFIK G-2 Periodic ReportR, 1948. 10. 2.

HQ, USAFIK G-2 Weekly Summary, 1948. 10. 8.

135) 「조선일보」, 1948. 10. 3, 「동아일보」, 1948. 10. 3.

136)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8. 10. 13.

137)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8. 10. 9, 「東亞日報」, 1948. 10. 13.

HQ, 6th Inf Div G-2 Periodic Report, 1948. 10. 8.

10월 8일 당일로 도전역에 걸쳐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¹³⁸⁾ 10월 11일 총사령부에서는 제주도경비사령부(사령관 김상겸대령)을 설치하고 제9연대 1개대대, 제6연대 1개대대, 제5연대 1개대대, 해군함정, 제주경찰대를 통합 지휘케 하였다.¹³⁹⁾ 대토벌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 경비사령부의 설치는 앞으로 6개월 이상 계속될 전울할 대학살극의 시작이었다.

10월 17일 9연대 대장은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발표 도민들에게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 매국적 행동에 단호 철추를 가하여 본토의 영원한 평화를 유지하며
....매국적 극렬분자를 소탕하기 위하여 10월 20일 이후 행동종료 기간중 전도해안선으로부터 5Km이외의 지점 및 산악지대의 무허가 통행금지를 포고함, 만일 차포고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그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폭도로 인정하여 총살에 처할것임¹⁴⁰⁾

그러나 10월 19일 제주도 출동명령을 받은 여수의 제14연대가 동족산잔과 반란의 갈림길에서 “동족산잔을 강요하는 제주도 출동명령 거부”를 기치로 여수에서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전선은 이제 본토로 확대되었다. 이미 여순 사건 이전부터 10월 17일부터 24일에 걸쳐 ‘경찰지서 및 반동배들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할 것’을 지령하고¹⁴¹⁾있던 제주도 인민해방군에게 있어 여수에서의 군인 봉기는 공격을 위한 좋은 계기였다.

인민유격대는 총지휘자 이덕구의 명의로 10월 24일 정부에 선전포고를 했고, 토벌대에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¹⁴²⁾

138) 제주도 문화공보 담당관실, 『제주도지』 상권, 제주도청, 1982, 622쪽.

13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해방과 건군』 제1권, 1967, 443쪽.

140) 「東亞日報」, 1948. 10. 20, 「朝鮮日報」, 1948. 10. 20.

141) HQ, USAFIK G-2 Weekly Summary 1948. 10. 22.

142) 金奉鉉·金民柱 공편, 『제주도 인민들의 4·3 무장투쟁사: 자료집』, 大阪: 文友社, 1963, 166쪽.

친애하는 장병, 경찰원들이여!
 총뿌리를 잘 살피라! 그 총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총은 우리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세금으로 산 총이다.
 총뿌리란 당신들의 부모, 형제, 자매들 앞에 쓰지말라!
 귀한 총자, 총탄알을 허비말라.
 당신네 부모, 형제, 당신들까지도 지켜준다.
 그 총은 총임자에게 돌려주자.
 제주도 인민들은 당신들을 믿고 있다. 당신들의 피를 희생으로 바치지 말 것을.
 침략자 미제를 이 강토로부터 쫓겨내기 위하여.
 매국노 이승만 일당을 반대하기 위하여
 당신들은 총뿌리를 놈들에게 돌리라.
 당신들은 인민의 편으로 넘어가라.
 내나라, 내집, 내부모, 내형제 지켜주는 빨치산들과 함께 싸우라.

친애하는 당신들은
 내내 조선인민의 영예로운 자리를 차지하라.

10월 23일 유격대는 제주시를 공격한 것을 비롯하여, 이동중인 경비대차량을 공격하는 등 공세를 강화했다. 23일 저녁에는 제주도 북쪽지방을 중심으로 50여개의 봉화가 올랐다. 곳곳에서 대중집회가 열렸고 북한기가 전시되곤 했다.¹⁴³⁾

여순 이후 10월말에 걸쳐 유격대는 서귀포·애월·서홍리·도두리·신흥리·조천·고흥리·한림 모슬포 등지에서 경찰지서를 공격하거나 토벌대와의 교전을 통하여 역량이 보존되고 있음을 과시했다. 11월 1일에는 경찰과 정부기관의 간부들을 살해하고 대규모봉기를 일으켜 제주도인민공화국을 수립하려는 경찰 11명이 포함된 계획이 공격시작 30분전에 서북청년단에 의해 발각되어 75명 전원이 체포, 무산되기도 했다.¹⁴⁴⁾

여순 사건은 제주도 유격대에게보다는 미군과 정부의 대좌익정책에 훨씬

143)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8. 10. 25.

144)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8. 11. 3,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165.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여순사건은 미국과 정부의 좌익 제거정책에 있어 중요한 아마도 가장 결정적일 지도 모를 전환점이었다.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이 사건이 향후 반공체제구축에 끼친 영향은 5·10단선이나 8·15정부 수립에 버금갈 정도의 중요성을 띠었다.

점령목표 그대로 확실한 친미반공기지를 구축해 놓고 철수해야 하는 미군과, 협애한 정통성에 대한 최대의 도전세력을 제거해야 하는 이승만 정권에 있어 민중과 정규군대가 광범위하게 연대하여 일으킨 반란은 좌익절멸을 위한 호기로서 받아들여졌다. 특히 48년 들어 중국내전에서 국부군의 계속적인 패퇴는 미군으로 하여금 남한내의 좌익을 절멸시키지 않고는 철수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여순사건은 또한 미군과 정부로 하여금 제주도에서의 항쟁을 본토의 공산주의세력과 연계된 정부전복음모의 일환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반란의 최초의 명분이 “동족상잔을 강요하는 제주도 출동 명령거부”였기 때문에 미군과 정부가 인식하기에 여순사건은 제주도에서의 공산주의 세력들이 제주도에서의 폭동을 본토로까지 확대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보기에 충분했다.

즉 여순사건은 그들에게 남한내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제 제주도에서의 폭동을 본토로까지 확산시켜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제주도에 이어 육지에 제2전선을 형성하여 제주도의 투쟁을 용이하게 해주고 14연대에 이어 전군에 반란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일거에 전복”¹⁴⁵⁾하려는 음모로 인식되었다. 여순사건 직후 국무총리겸 국방장관 이범석은 국회 제 89차 회의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여순에서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제주도 사태를 남한 각지에 전개시키려 하고 있다.”¹⁴⁶⁾고 보고했다.

14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해방과 건군』, 1967, 43쪽.

141) 「국회속기록」 제1회, 제89호, 1948, 671쪽.

이점이 즉 본토로의 확전에 의한 미군과 정부의 위기의식이 아마도 여순사건 이후 제주도에서의 진압작전이 전율할 학살극으로 전환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일 것이다. 여순 사건 직후 경비대는 해군함정을 동원하여 제주도 해안을 봉쇄, 선박출입을 금지시키고 육지와 모든 연결을 차단시켰다.¹⁴⁷⁾ 육지와 제주도 반란세력간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 차단이후 본격적인 학살이 시작되었다.

2) 항쟁의 좌절과 민중 수난의 지속

4·3항쟁의 통일정부 운동은 남한에 단독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단선저지의 통일운동에서 남한정부 반대, 북한정부 지지로 항쟁의 목표를 바꾼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제주도 남로당은 8·25지하선거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제주도는 인민해방군구라고 부르면서 3개의 선거구에서 선거를 실시하였다. 선거는 통일정부와 북한에서의 선거를 지지하고 남한정부를 반대하는 내용에 지지서명을 받는 서명투쟁이었고, 주로 밤을 이용해 중산간 마을이나 세력이 강한 마을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실시한 8·25지하선거는 시간의 촉박함과 지도부의 과대 목표로 자발적인 지지에 의하기보다는 강제성을 띠었기 때문에 예상만큼 많은 지지를 못 받아내었을 뿐만 아니라 서명을 거부하거나 북한정권과 북한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살해·구타·방화하는 잘못도 있었다.¹⁴⁸⁾

이러한 선거를 끝내고 이 선거명부를 가지고 남로당의 실질적 대표들은 북

14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해방과 건군』, 1967, 443쪽,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166.

148) HQ, USAFIK, G-2 P.R, 1948. 6. 18, 6. 24, 8. 24, 8. 25.

한 해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8월 초순 제주도를 떠난다. 이 시기에 지도부가 떠났다는 것은 항쟁에 대한 정리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항쟁이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제주민중은 이러한 객관적 정세 변화에 갈등을 느끼기 시작하지만 생존의 삶터에서 계속해서 추방당하여 입산한다. 민중들은 토벌대의 공격이 완화되어도 돌아갈 곳이 없었다. 많은 수의 마을은 불타 가옥과 양식이 소실되어 그들은 삶의 근거지도 생존의 기본 양식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생존의 갈등 속에서 민중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길을 분명히 선택하여야 했다. 8.25 지하선거에 참여하여 끝까지 싸우던가 아니면 생존을 위해 은둔을 하든가였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7·8월의 지하선거는 단선 거부와 지지에 훨씬 못미치게 된다. 민중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킨 것은 항쟁 목표가 변화와 항쟁 승리의 불확실성이었다. 단독정부의 출범으로 항쟁의 목표가 변화되고 승리를 장담하던 항쟁지도부의 예견에 불신이 일어났다.

경비대의 강경 진압 이후 항쟁지도부는 북조선지지 선거투쟁으로 전환하다가 항쟁지도부가 축소되면서부터 민중과의 단절현상이 일어나고, 민중들은 항쟁 실패와 생존에의 불안감으로 항쟁의 대열에서 점차 이탈하여 생존의 길을 모색한다.

항쟁은 강경한 미군정의 탄압, 단독정부의 출범, 항쟁지도부의 축소로 성격이 변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민중에게 생존에의 갈등과 공포를 가져다주었고, 아울러 항쟁주체로서의 길을 이탈하게 하였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불완전한 단선을 치르면서, 대한민국의 수립에 전력하였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단정을 거부한 제주도의 항쟁을 초강경으로 진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출범의 정당성과 미국의 세계전략에서의 승리를 보여주려 하였다.

이에 반란의 최초명분이 “동족상잔을 강요하는 제주도 출동 명령거부” 였던 여순사건의 발생은 미군과 정부로 하여금 제주도에서의 항쟁을 본토의 공산주의세력과 연계된 정부전복음모의 일환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즉 여순사건은 그들에게 남한 내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제 제주도에서의 폭동을 본토로까지 확산시켜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제주도에 이어 육지에 제2전선을 형성하여 제주도의 투쟁을 용이하게 해주고 14연대에 이어 전군에 반란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일거에 전복”¹⁴⁹⁾하려는 음모로 인식되었다. 여순사건 직후 국무총리겸 국방장관 이범석은 국회 제89차 회의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여순에서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제주도 사태를 남한 각지에 전개시키려 하고 있다.”¹⁵⁰⁾고 보고했다.

이점 즉 본토로의 확산에 의한 미군과 정부의 위기의식이 아마도 여순사건 이후 제주도에서의 진압작전이 전율할 학살극으로 전환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일 것이다. 여순 사건 직후 경비대는 해군함정을 동원하여 제주도 해안을 봉쇄, 선박출입을 금지시키고 육지와 모든 연결을 차단시켰다.¹⁵¹⁾ 육지와 제주도 반란세력간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 차단이후 본격적인 학살이 시작되었다.

10월 24일 경비대는 제주시내 동남방에 40여회에 걸쳐 박격포를 퍼부었다.¹⁵²⁾ 10월 29일에는 애월면 고성리에서 135명을 한꺼번에 사살했다.¹⁵³⁾ 이는 집단학살의 최초의 시작이었다. 곧이어 국방부는 인민군 총사령관 이덕구가 포함된 이 사살로 제주도 소요가 완전히 종식되었다고 발표했다.¹⁵⁴⁾

14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해방과 전군』, 1967, 43쪽.

145) 「국회속기록」 제1회, 제89호, 1948, 671쪽.

15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해방과 전군』, 1967, 443쪽,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166.

152) HQ, USAFIK G-2 P.R, 1948. 10. 25

153) HQ, USAFIK G-2 P.R, 1948. 11. 3.

그러나 보다 더 많은 전과, 보다 더 많은 사살은 이 발표후에 시작되었다. 11월의 약 20일간 500여명의 유격대가 사살되었다.¹⁵⁵⁾ 그러나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사살된 전체 숫자가 아니라 군경토벌대와 유격대간의 1:100이라는 전사자 비율의 심한 불균형이다. 이것은 직접적인 교전에 의한 사살이 아니라 폭도로 사살된 많은 숫자가 일반 민중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기간 중에는 또 많은 마을들이 쌍방에 의해 소실되었다. 토벌대는 유격대와 주민을 분리시키고, 유격대의 근거지를 빼앗아 효과적인 진압을 하기 위해 마을 전체를 불살라 버리고, 집단부락, 전략촌을 건설하여 주민들을 집단이 주시키는 소진전략, 소개전략을 채택하고 있었다. 삶의 근거지를 박탈당한 주민들은 산과 해안의 선택을 강요받았으며, 토벌대를 피해 입산한 주민들은 나중에 모두 폭도로 몰려 집단사살 당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토벌은 더욱 강력해졌다. 12월 3일에서 6일 사이에 토벌대는 105명을 사살하였고,¹⁵⁶⁾ 12월 14일에는 민간인 3000여명을 동원한 합동작전에서 105명을 사살했다.¹⁵⁷⁾ 이즈음 토산리에서는 18세에서 40세의 남자 157명이 집단학살을 당했다.

12월 18일 9연대는 130여명을 사살¹⁵⁸⁾하는 등 12월 중순을 전후 한 약 1-2주간에 걸쳐 토벌대는 700-1000여명을 학살했다. 9연대가 이와 같이 12월 중순에 토벌에 성공하고 있는 이유는 12월 29일 교체할 2연대를 의식하여 “다음에 올 2연대에 비해 좋은 전과와 기록을 올리려는 욕망”¹⁵⁹⁾ 때문에도 기인했다.

154) 「東亞日報」, 「朝鮮日報」, 「서울신문」, 1948. 11. 6.

155) 존 메릴, 『침략인가 해방전쟁인가』, 과학과 사상, 1988, 261, 291쪽.

156) HQ, USAFIK G-2 P.R, 1948. 12. 8.

157) HQ, USAFIK G-2 P.R, 1948. 12. 16.

158) HQ, USAFIK G-2 P.R, 1948. 12. 24.

159) HQ, USAFIK G-2 P.R, 1948. 12. 14.

연대 교체기를 이용해 유격대는 공세를 재개했다. 유격대는 1월 3일 한림, 삼양리 등을 공격하며 민간인을 살해하고 납치, 방화하는 등 신년공세를 강화했다.¹⁶⁰⁾

이에 제2연대는 1월 4일 육해공군 합동작전으로 대응했다. 육해공군 합동작전의 결과 “해안에서 한라산으로 이르는 4Km이내의 부락은 대부분 군경의 토벌작전으로 초토화되어 주민들은 토벌을 피해” 입산해 버렸다.¹⁶¹⁾ 1월 16일, 4·3항쟁의 전 기간 중 가장 많은 민중이 집단적으로 학살된 북촌리의 대학살이 발생했다. 학살은 순전히 토벌대의 보복으로 자행된 것이었다. 즉 제2연대 제3대대 7중대가 이동도중 북촌리 부근에서 유격대의 기습을 받고 2명의 군인이 사망하자, 군인들은 북촌리 주민들을 학교운동장에 집결시켜놓고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이튿날에도 학살은 계속되었다. 순식간에 5-600명의 주민들이 학살되었다.¹⁶²⁾ 학살은 북촌리 뿐만이 아니었다. 북촌리에 앞서 용강리, 도두리, 노형리, 오라리 등 제주시 동부 8리도 대거학살을 당했다.¹⁶³⁾

토벌대의 자체실수가 양민학살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 예컨대 1월 6일 제2연대는 연대장 함병선의 직접 지휘로 함덕리에 유격대로 위장침투했다가 암호실수로 발각되자 연대장등은 그곳을 빠져 나온 뒤 마을을 대포로 집중가격하여 300여명을 사살했다.¹⁶⁴⁾ 이 밖에도 술한 마을에서 때론 유격대에 의해, 때론 토벌대에 의해, 때론 쌍방간의 교전에 의해 죽어가는 양민이 속출했다.

유격대는 연말에 있었던 대규모 토벌로 현저히 약화되어 있었으나 그들은 근절되지 않고 끈질기게 저항하며 토벌대에 적지않은 손실을 입히고 있었다. 이러한 끈질긴 저항은 신생정부의 위신에 있어 치명적이었다. 그것은 그 정부

160) HQ, USAFIK G-2 P.R, 1949. 1. 6, 1. 7.

161) 한국전쟁사 I, 445쪽.

162) 「제남신문」, 1978. 12. 4.

163) 오성찬, 앞의 글, 572-574쪽.

164) 「東亞日報」, 1949. 1. 12.

를 탄생시킨 미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정부는 최후의 소탕작전을 수립, 1949년 3월 2일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했다.¹⁶⁵⁾ 이범석은 제주도의 비극은 미군정에 의해 채택된 무력에 의한 진압방침에 큰 책임이 있다며 정부는 “진압과 선무공작을 병용하는 5분정치, 5분군사”작전으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¹⁶⁶⁾ 정부는 “3월 25일까지 귀순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는 폭도절멸을 위한 강력한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¹⁶⁷⁾ 선무작전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 하산자가 늘어났다.

정부는 3월 25일까지 귀순기한을 주었으나 그 기한이 끝나기도 전에 폭도절멸을 위한 최후의 진압작전을 개시했다.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3월중 제주도에서의 전투에서 729명의 적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¹⁶⁸⁾

유재홍부대의 진압작전 결과 유격대의 규모는 현저히 축소되었고 토벌을 사실상 종결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4월 들어 유격대와 토벌대 간의 소규모 전투가 있었으나 유격대의 규모와 역량은 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이들의 저항은 이제 생존을 위한 정항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4·3민중항쟁은 봉기발발 1년만에 표면적으로 종결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1949년 5월 5일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되었다.¹⁶⁹⁾ 전투사령부의 해체와 함께 소규모의 병력만을 남겨놓은 채 대부분의 군경이 5월 17,18일에 걸쳐 서울로 철수했다.¹⁷⁰⁾ “공산도배를 소탕한 공로로 이들은 정부 고위관계자들 상당수가 출영을 나온 가운데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전투 사령부 해체와 그 에 이은 군경 철수는 토벌이 종식되었음을 의미했다.

165) 한국전쟁사 I, 446쪽.

166) 「서울신문」, 1949. 3. 17.

167) 「東亞日報」, 「朝鮮日報」, 1949. 3. 16, 「서울신문」, 1949. 3. 15.

168) 「東亞日報」, 1949. 4. 8.

16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해방과 건군』, 1967, 448쪽.

170) 「東亞日報」, 「朝鮮日報」, 1949. 5. 18.

1949년 4월 9일 이승만은 제주도를 방문하여 폭동이 종식되었음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이승만의 방문을 앞두고 최후의 소탕전이 전개되었음은 물론이었다. 이승만의 제주도 방문은 마치 자신을 반대한 민중들에 대한 승리의 표시처럼 보였다. 당시 신문은 30만 도민중 15만이 대통령을 환영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¹⁷¹⁾ 그러나 이 대규모의 환영은 동원에 의한 환영이었거나 아니면 “우리는 빨갱이가 아니니 더 이상의 학살은 중지해 달라”는 무언의 의사표시였을 것이다.

6월 9일 정부는 제주도인민해방군 사령관 이덕구를 6월 7일 사살함으로써 제주도 소탕전은 완전히 종식되었다고 발표했다.¹⁷²⁾

그러나 제주도의 유격대는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았다. 전투사령부의 해체 후에도 그들은 끈질기게 저항했다. 정부는 이들을 소탕하기 위해 독립 제1대대, 제 100전투경찰사령부, 해병대, 무지개부대를 투입하여 진압작전을 전개했다. 무지개 부대의 진압작전 결과 항쟁은 완전히 종식되었다. 그것은 항쟁발발한지 10년만이 1953년이였다.

이렇게 1943년에 단선저지를 목표로 통일정부를 꿈꿔왔던 제주도의 항쟁은 남로당의 연계로 남한정부 반대, 북한지지의 성향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성향은 남한정권의 정당성과 미국의 반공 세계화 질서에 정면으로 상충되는 것이었기에 남한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남로당은 학살이 시작될 즈음에는 입북하여 책임을 회피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제주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만이 학살당하였다. 4·3은 항쟁은 대규모의 인명피해와 제주공동체에게 레드컴플렉스를 남겨주었다.

171) 「東亞日報」, 1949. 4. 12.

172) 「東亞日報」, 「朝鮮日報」, 1949. 6. 10.

5. 결 론

8·15 해방과 함께 우리 민족은 식민지잔재와 반봉건구조를 청산하고 자주적 독립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냉전정책을 비롯한 해방정국기의 상황으로 단선이라는 남북분단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이 5·10단선이라는 남북분단의 위기 하에서, 제주도당은 5·10단선을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는 인식과 미군정, 우익의 탄압으로부터 당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 속에서 당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자위적인 측면이 맞물리면서 4·3 무장투쟁을 결정하였다. 제주도당의 이러한 결정은 3·1절 기념시위와 3·10총파업을 기점으로 탄압을 가중시켰던 미군정과 중앙과 지방의 갈등구조를 이용한 보이는 서북 청년단의 탄압에 투쟁하려는 일반 제주도민의 상황과 결합하면서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따라서 4·3 투쟁의 측면은 제주도당의 독자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단선저지라는 정치적인 측면과, 제주도민의 투쟁방향에 따른 미군정·경찰·서북청년단의 탄압에의 투쟁이라는 측면이 혼재되어 통일정부 수립론으로 귀결된다.

제주에서의 통일정부 수립의 움직임은 해방과 더불어 새로운 자주적 독립국가를 열망하는 건준·인민위원회의 활동이 분단의 상황으로 변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는 미군정 정책으로 부터의 자율성과 좌우합작적 온건한 인민위원회의원의 성향으로 정치적 통일정부수립의 움직임이라기 보다는 치안유지·적산활동·자치교육운동·정치활동 등을 통한 자주적 독립국가의 지향이었으며 분단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4·3항쟁에서의 통일정부론에서는 단선저지와 미군정·경찰·서북청년단의 탄압으로 인해 정치적 성격을 가진다. 제주 4·3 항쟁에서의 통일정

부 수립론은 3시기로 전개된다. 제1시기는 단선이 시작되기 전까지인 1948.4.3-8월말까지의 시기로, 제주민중이 과거의 역사적 저항운동의 경험, 해방이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 운동주체(남로당) 역량에 대한 낙관적 인식과 객관적 정세의 주관적 판단 등이 복합적으로 상승 작용하여, 당중앙과 분리되어 자주적인 남로당과 연대해 민중항쟁으로 발전·전개된 시기이다. 이 시기는 보복적 차원의 성격이 강했으며, 단선반대를 통일정부 지지로 인식했다.

제2시기는 1948.9월-1949.5월 15일로, 비록 제주도에서는 선거를 파탄·저지시켰지만 중앙에서는 선거가 치러지고 단독정부 수립이 기정 사실화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남로당이 당 중앙과 긴밀히 연계되면서 단선반대는 곧 남한정부에 대한 반대이며 이들의 통일정부론은 인민공화국의 지지였다.

제3시기는 1949.5.15~1953.6월말로, 단독정부 수립 후 이제는 통일정부 수립이 아닌 본격적인 북한지지의 성격을 지니며 이로 인한 미군정과 남한정부의 탄압으로 민중에게 항쟁의 이상은 지워지고 수난의 현실이 다가오는 시기이다.

이렇듯 제주 4·3항쟁의 발단은 제주민중의 역사적 저항운동의 경험, 해방이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 운동주체(남로당) 역량에 대한 낙관적 인식과 객관적 정세의 주관적 판단 등이 복합적으로 상승 작용하여, 당중앙과 분리되어 자주적인 제주지부 남로당과 연대한 것이었다. 그 성격은 반미·반서북 청년단으로 인한 보복적·방어적 차원의 제한적 공격이었으며, 단순한 단선저지의 차원이었다.

그러나 남한의 정치세력 중 반공이데올로기 구축과 단선반대로 고립된 남로당 당중앙과 긴밀히 연계되면서 자주적·방어적 성격을 잃고 남로당 당중앙의 통일정부론을 반영하는 정치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제 단선반대는 곧 남한정부에 대한 반대이며 이들의 통일정부론은 인민공화국의 지지였다.

그러나 이들의 통일정부구상은 초기의 자치적이고 통일정부를 지향하는 움직임에서 나아가 공산주의적·북한정권 지지의 성격을 포함 것이었기에 대한민국 출범의 정당성과 미국의 반공세계이데올로기 질서를 구축하려는 당시의 흐름에 의해 탄압받고 좌절되었다.

일제지배하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주독립국가를 세우려던 우리에게 세계라는 틀은 냉전의 구도와 반공주의란 이데올로기의 틀로 우리를 분단시켰다. 여기에 저항하려던 제주도는 빨갱이 섬으로 몰렸고, 이에 서북 청년단은 중앙과 변방이라는 차원에서 이에 일조 하였다.

제주도의 탄압이 해방정국이란 특수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아직 통일도 되지 않았고, 중앙과 변방이라는 지역갈등의 문제도 해소되지 않은 현재 세계화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4·3항쟁의 통일정부에의 열의, 그들의 희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해방과 건군』, 1967.

국회사무처, 「국회속기록」 제1회, 제89호, 1948.

「노력인민」(이정식 외, 『韓國現代史資料叢書』 5, 돌베개, 1986.)

「東亞日報」

「서울신문」

「朝鮮日報」

「濟州新報」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한림대 아시아문화 연구소, 『주한미국정보일지』 1-6권, 한림대 아시아문화 연구소, 1989 영인)

HQ, USAFIK G-2 Weekiy Report(『주한미군정보요』)

2. 단행본

高文昇 編著, 『박헌영과 4·3 사건-남로당의 제주폭동과 한민당 정권의 과잉진압』, 新亞文化社. 1984.

김동만, 「제주지방 건국준비위원회·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역사비평사, 1991 계간 12호.

김남식, 『남로당 연구』 I.Ⅱ.Ⅲ, 돌베개, 1984.

김남식·심지연 편저, 『박헌영 노선비판』, 世界, 1986.

金奉鉉·金民柱 공편, 『제주도 인민들의 4·3 무장투쟁사: 자료집』, 大阪: 文友社, 1963. (아라리연구원 엮음, 『제주민중항쟁』 Ⅱ,

소나무, 1988.)

김봉현, 『제주도 역사지』, 대판, 교문사, 1960.

김인길 외 편저, 『한국현대사 강의』, 돌베개, 1998.

김점곤,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 박영사, 1973.

김창후, 「1948년 4·3항쟁 봉기와 학살의 전모」, 역사비평사, 1993 계간 20호.

노민영 엮음, 『잠들지 않는 남도』, 온누리, 1988.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7.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2- 1948~1950 민족주의·민주주의 그리고
반공주의-』, 역사비평사, 1996.

역사문제연구소편, 『한국 정치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대항 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1994.

역사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한국역사연구회 편, 『제주 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방기중,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1930.40년대 백남운의 학문과 정치경제사상
』, 역사비평사, 1992.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김자동 역, 일월서각, 1986.

서중석, 『한국 현대 민족운동 연구』, 역사비평사, 1991

서중석, 『한국 현대 민족운동 연구 2: 1948-1950 민주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반공주의』, 역사비평사, 1996.

宋南憲, 『解放三年史 1945-1948』Ⅱ, 까치, 1985.

오성찬,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 실천문학사, 1989.

정해구, 『남북한 분단정권 수립 과정 연구』, 고려대 정외과 박사학위논문,
1995. 8.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1. 2. 3, 전예원, 1994.

제주도 경찰국, 『濟州警察史』, 1990.

제주도 문화공보 담당관실, 『제주도지』 상권, 제주도청, 1982.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1. 2, 한울, 1989.

제주4·3연구소, 『4·3 長征』 1. 2 .3. 4, 백산서당, 1990.1991.

제주4·3연구소, 『4·3 長征』 5. 6, 나라출판, 1992. 1993.

존 메릴, 『침략인가 해방전쟁인가』, 과학과 사상, 1988.

풀잎 편집부편, 『전통시대의 민중운동(하):홍경래난에서 이필재난까지』
풀빛, 1981.

한상구, 『분단 50년과 통일시대의 과제』, 역사비평사, 1995.

Bruce Cum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2, Princeton Univ.Press, 1990.

3. 논문, 잡지 기고문

고창훈, 「4·3민중항쟁의 전개와 성격」, 『解放前後史의 認識』 4, 한길사, 1989

고창훈, 「4·3민중운동을 보는 시각과 과제」, 『실천문학』, 1989 봄.

고창훈, 「민중적 관점에서 본 4·3항쟁」, 『성신학보』 제250호, 1989. 4.

고창훈, 「4·3 민중항쟁의 고찰과 그 현재적 의미」, 『한림대 학보』,
제52호, 1989. 5.

김남식, 「1948-1950년대 남한내 빨치산 활동의 양상과 성격」,
『解放前後史의 認識』 4, 1989.

김남식, 「전쟁 전후 남한에서의 무장유격투쟁의 성격」, 최장집 편,
『한국전쟁연구:한국현대사의 이해』 I, 태암, 1990.

金大根, 「제주도 4·3사건의 정치적 배경에 관한 연구」,
동의대 문학석사 학위논문, 1996.

김민주, 「4·3 제주도 사건」, 『아사히 저널』 1988. 4. 15.

김창후, 「1948년 4·3항쟁, 봉기와 학살의 전모」, 『역사비평』, 1993 . 봄

- 朴明林, 『濟州道 4·3 民衆抗爭에 關한 研究』, 고대 정외과 석사학위논문, 1988.
- 林建彦, 「제주사태와 여수 순천 사건」, 『한국현대사』, 삼민사, 1986.
- 박명림, 「제주도 4·3 민중항쟁의 전개과정에 대한 略述」,
『제주도 현대사의 재조명』, 심포지엄 발표문, 1988.
- 송두울, 「세기말에 띄우는 송두울 교수의 조국통신- '세계화' '일체화', 제3의 길은 없는가」, 『말』, 1991. 1.
- 沈地淵, 「朴憲永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론과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 건설 운동」, 『韓國史 市民講座』 제17집, 一潮閣, 1995.
- 沈地淵, 「해방후 주요 정치집단의 체제구상 및 정책 비교」,
『韓國史 市民講座』 제12집, 一潮閣, 1993.
- 梁正心, 『제주 4·3항쟁에 관한 연구-남로당 제주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 논문, 1995. 8.
- 梁漢權, 『제주도 4·3 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 정치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8.
- 오성찬, 「40년 제주의 한: '4·3사건의 진상」, 『신동아』, 1988. 4월호,
- 이기명, 「5·10선거의 전개과정과 국내정치세력의 대응」, 연대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 조남수, 「4·3 진상」, 『관광제주』, 1988.
- 조덕송, 「유혈의 제주도」, 『신천지』, 1948. 7월호.
- 정해구, 「미군정기 이데올로기 갈등과 반공주의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1994.
- 최봉대, 「전후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분단체제의 구축」,
『해방직후의 민족문제와 사회운동』, 문학과 지성사, 1988.

ABSTRACT

A Study on the 4 • 3 Resistance of Cheju Residents

- With Reference to A Characteristic as A Movement of
Establishment of A Unified Government -

Han, Mi Young

Major in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issues of the partition of N. Korea and S. and the feud or conflict between regional communities which should be decided beforehand in the first place before the establishment of our(Korean) subject in order to progress toward globalization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4 • 3 Resistance of Cheju residents in a period of the political situation of liberation.

The 4 • 3 Resistance of Cheju Residents is a movement of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government motivated from anti-foreign power, anti-government, self-government independentism, which was broken out on April 3, 1948 with a medium of a struggle rejecting an exclusive election by the Namro political party under the circumstances of partition of N. Korea and S. The movement of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government through the 4 • 3 Resistance of Cheju Residents was caused by a by-product of the process of the confrontation of the two orders of the world - the ideologies of the U.S.A and Soviet, and it can be recognized

as a movement to resist the government's suppression and an anti-government movement by Cheju residents in order to hamper the direct control of Korea by the U.S.A and Soviet.

In a crisis of partition of N. Korea and S. along with 5 • 10 election(the election on May 10), the Chejudo political party recognized to necessarily hamper the 5 • 10 exclusive election; and in a situation that the party's survival or existence be endangered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the right wing's suppression, a self-defensive aspect enabling the party's activity went in gear with it and the 4 • 3 armed resistance was determined to be carried by the party. Such a determination of the party could acquire its legitimacy in combination with the situation of Cheju residents who were fighting against the suppression of the *Seobuk Chungnyondang*(*Seobook* Young People's Group) which seemed to utilize the U.S. military government accelerating the suppression from a starting point of the demonstration to commemorate the anniversary of the 3 • 1(Samil)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3 • 10 Total Strike and the conflict structure between the central region and local region.

Therefore, the 4 • 3 armed resistance of Cheju residents can be concluded as a theory of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government, in a mix of a political aspect of hampering an exclusive election according to the Chejudo party's unique interests and an aspect of fighting against the suppression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police, and *Seobuk Chungnyondang*(*Seobook* Young People's Group).

After all, the theory of a unified government by the 4 • 3 armed resistance of Cheju residents is characterized by politics caused by the hinderance of exclusive election and the suppression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police, and *Seobuk Chungnyondang*(Seobook Young People's Group). And the theory of establishment of a unified government by the 4 • 3 armed resistance of Cheju residents can be developed in three periods; the 1st period is from April 3 to the end of August, 1948 until the beginning of the exclusive election - the period during which the resistance of populace was developed and evolved into the resistance of the populace being separated from the center of the political parties and then jointing with the independent Namro political party in a mixedly multiplied effect of the Cheju resident's experience of the past, historical resistance movement, political and economical situations since the Liberation, optimistic awareness of the capacity of the Namro political party(the subject of the movement), subjective judgement of the objective situation, etc. This period was strongly characterized by a dimension of revenge, and the rejection of the exclusive election was recognized as a backup to a unified government.

The 2nd period is from September, 1948 to May 15, 1949, during which even though the selection came to a rupture and hampered in Cheju Island, the election was carried out in the central region(Seoul); and in that period, establishment of an exclusive government became an established fact. In this period, with the Namro political party being closely associated and linked with the center of the party, rejection of the exclusive election meant the very objection agains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ir theory of a unified government meant the very support to a people's republic.

The 3rd period was from May 15, 1949 to the end of June, 1953, during which since the exclusive government established, the regular backup

for N. Korea was characterized, not that unified government being characterized. And resultantly, in that period, with suppressions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the S. Korea government, the ideal of the resistance of the populace was erased and the realities of ordeal was approaching.